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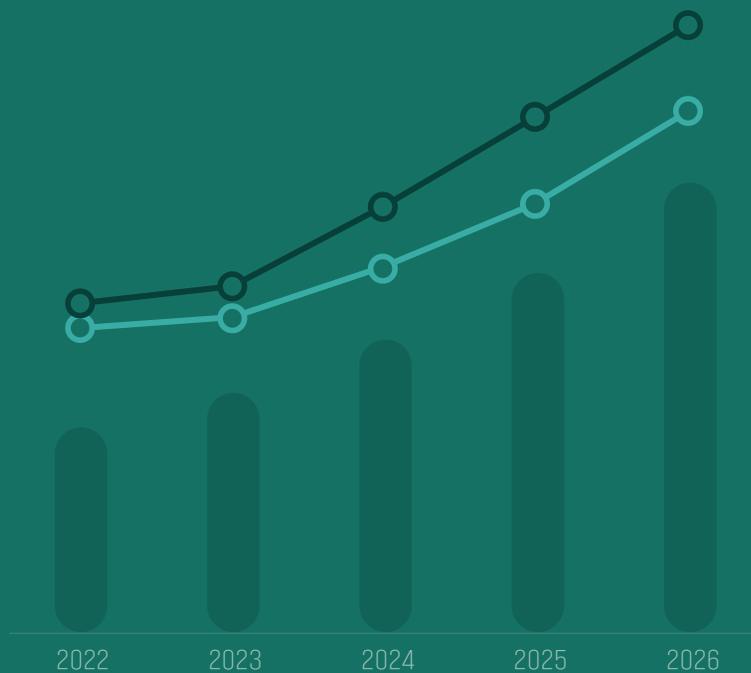


2022.10.

국회에산정책처 | 국세수입 전망

#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 Tax Revenue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23년 및 중기 국제수입 전망

##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총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전망·작성 | 총괄 박정환  
소득세 강민지, 박지원, 문석휘  
법인세 박정환, 이정훈  
부가가치세 김효경  
기타 세목 최천규, 고은비, 박성은

지원·편집 | 인정은, 오아라 행정실무원  
이주은, 박근우 자료분석연구원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2.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최근 국내외 경제의 하방 위험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나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0.5%(58.5조원) 증가하였던 국세수입은 2022년에도 14.8%(50.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로 법인영업실적이 개선된 것과 민간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3년은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감소형 세제 개편 등은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은 국세 수입 개선세가 둔화되며 1%대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미국의 긴축기조에 따른 금리 인상 지속, 미-중 무역갈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향후 세입여건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및 예산연도를 포함한 2022~2026년의 국세 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및 관련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 차 례

## 요 약

### I.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1

1.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	1
가. 거시경제 여건 .....	1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	3
2.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4
가. 총괄 .....	4
나. 세목별 전망 .....	7

### II.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27

1. 2023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	27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30
가. 총괄 .....	30
나. 세목별 전망 .....	32
3.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51

### III. 2022~2026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55

1. 2022~2026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	55
2.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	59
가. 세목별 전망 방법 .....	59
나.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	61
3. 2022~2026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63

## 〈표 차례〉

[표 1] 2022년 거시경제 여건 .....	2
[표 2] 2022년 8월 국세수입 실적 .....	4
[표 3]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6
[표 4] 2022년 소득세 전망 .....	7
[표 5] 2022년 법인세 전망 .....	14
[표 6] 2022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기준, 2021~2022년 .....	15
[표 7] 유가증권상장사 실적 증감률: 2017~2021년 .....	16
[표 8] 외감법인(비금융업) 실적 증감률: 2017~2021년 .....	16
[표 9] 2022년 부가가치세 전망 .....	17
[표 10] 2021년 및 2022년의 8월 누적 기준 부가가치세 징수액 현황 .....	18
[표 11] 2022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	20
[표 12]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변화 .....	21
[표 13] 2022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	22
[표 14]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추이 .....	25
[표 15]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29
[표 16]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31
[표 17] 2023년 소득세 전망 .....	32
[표 18] 고용시장 지표와 근로소득세수 .....	34
[표 19] 2023년 법인세 전망 .....	39
[표 20] 기업 경영 실적 추이 .....	40
[표 21] 업종별 증권사 경영실적 전망 평균(컨센서스) .....	43
[표 22] 2023년 부가가치세 전망 .....	43
[표 23] 2023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	45
[표 24] 개별소비세 에너지 주요 과세품목 소비량: 2018~2023년 .....	45
[표 25] 2023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	47
[표 26] 2022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51
[표 27] 2023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전망 비교 .....	52
[표 28]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	53
[표 29]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	55
[표 30] 세목별 주요 정책 변화 .....	57

[표 31] 2023~2026년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58
[표 32] 세목별 증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59
[표 33]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NABO) ……	62
[표 34]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	63

## 〈그림 차례〉

[그림 1]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	8
[그림 2]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 ……	9
[그림 3] 종합소득세 국민계정상 과세베이스 ……	10
[그림 4] 자영업자 가구 사업소득 증가율 ……	10
[그림 5] 자영업자 가구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가율 ……	11
[그림 6]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과표양성화 지표 ……	11
[그림 7]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	12
[그림 8]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	12
[그림 9] 토지거래량 연도별 추이 ……	12
[그림 10] 주택거래량 연도별 추이 ……	12
[그림 11] 세계교역량 및 주요 품목 수출액 추이 ……	15
[그림 12] 회사채(3년물, AA-) 금리 추이: 2020.1.~2022.9. ……	17
[그림 13] 명목 민간소비 관련 변수의 추이: 2021~2022년 ……	18
[그림 14] 수출 및 수입 관련 변수의 추이: 2021~2022년 ……	19
[그림 15]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금액 및 증감 추이 ……	21
[그림 16]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지가 변동률 추이 ……	23
[그림 17] 부동산 유형별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21.1.~2022.8. ……	23
[그림 18] 월별 증권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2021.12.~2022.9. ……	24
[그림 19]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2013~2022년 ……	25
[그림 20]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전망 ……	27
[그림 21]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전망 ……	33
[그림 22]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35
[그림 23] 자영업자 가구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감율 ……	35
[그림 24]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 및 가격지수의 연도별 증감률 ……	36
[그림 25]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추이 ……	37

[그림 26] 주택가격전망지수 추이 .....	37
[그림 27] 반도체 가격 추이 .....	41
[그림 28] 수출입 물가지수 및 교역조건: 2021~2022.7. ....	41
[그림 29]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 추이: 2021.1.~2022.10. ....	42
[그림 30] 가계 소득 및 소비 동향 관련 조사 결과: 2021~2022년 .....	44
[그림 31] 국제 유가 추이 .....	46
[그림 32]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2011~2023년 .....	47
[그림 33]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19~2022.8. ....	48
[그림 34] 증권거래대금과 환율·금리 비교 .....	49
[그림 35] 투자자별 주식 매도액 .....	49
[그림 36]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2017.8.~2022.8. ....	50

## 〈2022~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2~'26	'17~'21
실질GDP 성장률	2.5	2.1	2.3	2.3	2.1	2.2	2.1
경상GDP 성장률	4.7	4.6	4.3	4.1	3.9	4.2	3.1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2.2	2.5	2.0	1.8	1.8	2.0	0.9
통관수출 증가율	9.9	0.5	5.9	6.9	6.8	5.0	2.9
통관수입 증가율	18.4	1.1	6.6	7.7	6.7	5.5	6.5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3.3	2.7	2.4	2.1	3.1	1.4
취업자수 증가(만명)	80	9	10	12	11	24	17
명목임금 상승률	4.9	3.9	3.9	3.6	3.3	3.7	3.6
국고채금리(3년)	3.0	3.0	2.8	2.6	2.6	2.8	1.6
회사채금리(3년, AA-)	3.8	3.5	3.0	2.9	2.8	3.2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 [국세수입 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2~'26	'17~'21
NABO 국세	394.9	399.4	413.2	432.3	453.8	3.5	6.7
소득세	129.5	132.4	141.1	152.9	164.5	6.2	11.0
법인세	102.3	106.0	104.5	107.0	110.9	2.0	4.4
부가가치세	80.1	82.7	87.3	91.1	94.7	4.3	1.5
기타 <sup>1)</sup>	83.0	78.4	80.3	81.4	83.7	0.2	8.4
- 기타 소비세수	39.3	40.4	41.8	43.1	44.1	3.0	△0.01
- 기타 자산세수	43.7	38.0	38.5	38.3	39.6	△2.5	20.4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요 약

### I. 2022년 국세수입 전망

2022년 국세수입은 394.9조원으로, 2021년 344.1조원 대비 50.8조원(14.8%) 증가, 추경예산<sup>1)</sup> 396.6조원 대비 1.8조원(△0.4%) 낮을 전망

- 2022년 국세수입은 394.9조원으로, 법인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50.8조원(14.8%) 증가<sup>2)</sup>하나, 추경예산을 1.8조원(△0.4%) 하회할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31.9조원(45.3%) 증가하며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증가하며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
  
-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임금 및 사업소득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 대비 15.4조원(13.5%)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5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 회복세와 임금 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11.6조원(24.5%) 증가할 전망
    - 임금근로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0년) △10.8 ('21년) 42.1 ('22.1~8월) 84.8
    - 명목임금상승률(전년 대비, %): ('20년) 1.1 ('21년) 4.6 ('22.1~7월) 5.5
  - 종합소득세는 25.5조원으로,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상승 및 납부유예된 '21년 세수의 금년 수납(2.7조원, 정부추산) 등으로 2021년 대비 9.5조원(59.5%)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이하 '추경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의결)을 의미한다.

2) 한편,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세정지원 등으로 납부유예되어 2022년으로 이연된 국세수입 9.8조원을 감안한 2022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준이다.

-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0.4Q)  $\Delta$ 5.4 (21.1Q)  $\Delta$ 0.8 (21.2Q) 5.9 (21.3Q) 4.9 (21.4Q) 9.2
- 2021년 납부되었을 약 2.7조원의 중간예납세액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2022년에 수납
- 양도소득세는 30.3조원으로, 자산시장 부진으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대비 6.5조원( $\Delta$ 17.6%) 감소할 전망
  - 주택 거래량(매매 및 분양권 합계, 만호): (21년) 108 (22.1~8월) 41
  - 토지 거래량(매매 및 분양권 합계, 만필지): (21년) 278 (22.1~8월) 133
- 법인세는 102.3조원으로, 기업영업실적 호조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31.9조원(45.3%)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86.4조원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와 경제 회복 등으로 법인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21년 대비 31.0조원 (55.8%) 증가할 전망
    - 통관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Delta$ 5.5, (22년) 25.7
    - '21년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가율(전년 대비): 121.6%
  - 법인세 원천분은 15.9조원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0.9조원 (6.2%) 증가할 전망
    - 회사채 금리(3년물, AA-, %): (21.4Q) 2.4 (22.1Q) 2.8 (2Q) 3.9 (3Q) 4.4
- 부가가치세는 80.1조원으로, 민간소비와 통관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8.9조원(12.5%)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 개선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통관수입액 증가세도 이어지는 모습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2.1Q) 7.8 (2Q) 8.3
    - 통관수입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1년) 31.5 (22.1~8월) 25.9
  - 다만, 2022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3.7%로 2.7%p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2년 기준 세수효과는  $\Delta$ 2.8조원으로 추정

- 기타 소비세수<sup>3)</sup>는 39.3조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대비 2.7조원(△6.4%) 감소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11.4조원)와 개별소비세(9.2조원)는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각각 5.2조원(△31.6%), 0.2조원(△2.2%) 감소할 전망
  - 반면, 관세는 10.7조원으로,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증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2.5조원(30.0%)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sup>4)</sup>는 43.7조원으로,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세 둔화로 2021년 대비 2.7조원(△5.8%) 감소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4조원으로 자산평가액 등의 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0.4조원(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증권거래세는 6.5조원으로, 금리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대비 3.7조원(△36.3%) 감소할 전망
    - 8월 누적 기준 증권거래대금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코스피) △44.6 (코스닥) △38.2
  - 종합부동산세는 6.9조원으로,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0.7조원(12.2%) 증가할 전망
    - 2022년 전국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 주택 14.7, 토지 9.9
    -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됨에 따라 세수 증가세는 '21년 70.3%에서 12.2%로 둔화될 전망

3)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4)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44.1	396.6	394.9	50.8	14.8	△1.8	△0.4
일반회계	332.5	386.2	384.2	51.7	15.5	△2.1	△0.5
내국세	296.4	351.9	350.6	54.2	18.3	△1.3	△0.4
1. 소득세	114.1	127.8	129.5	15.4	13.5	1.6	1.3
2. 법인세	70.4	104.1	102.3	31.9	45.3	△1.8	△1.7
3. 상속증여세	15.0	15.9	15.4	0.4	2.6	△0.5	△3.2
4. 부가가치세	71.2	79.3	80.1	8.9	12.5	0.8	1.0
5. 개별소비세	9.4	10.1	9.2	△0.2	△2.2	△1.0	△9.7
6. 증권거래세	10.3	7.5	6.5	△3.7	△36.3	△1.0	△13.3
7. 인 지 세	1.0	0.9	0.8	△0.1	△12.5	△0.1	△11.5
8. 과년도수입	5.1	6.2	6.8	1.7	32.8	0.7	11.1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0.9	11.4	△5.2	△31.6	0.5	4.2
관 세	8.2	10.1	10.7	2.5	30.0	0.6	6.3
교 육 세	5.1	4.7	4.6	△0.5	△9.9	△0.1	△2.7
종합부동산세	6.1	8.6	6.9	0.7	12.2	△1.7	△20.2
특별회계	11.6	10.4	10.7	△0.9	△7.6	0.3	2.7
주 세	2.7	3.7	3.5	0.8	29.6	△0.3	△7.3
농어촌특별세	8.9	6.7	7.2	△1.7	△18.7	0.6	8.3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II. 2023년 국세수입 전망

2023년 국세수입은 399.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sup>5)</sup> 400.5조원 보다 1.0조원 낮을 전망

### 1.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2023년 국세수입은 399.4조원으로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sup>6)</sup>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칠 전망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며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GDP성장률(4.6%)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자산세수는 감소할 전망
  
- 소득세는 132.4조원으로,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 대비 2.9조원(2.2%) 증가에 그칠 전망
  - 근로소득세는 61.6조원으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2.8조원(4.7%) 증가할 전망
    - 임금근로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1년) 42.1 ('22년<sup>e</sup>) 71.9 ('23년<sup>e</sup>) 17.8
    - 명목임금상승률(전년 대비, %): ('21년) 4.6 ('22년<sup>e</sup>) 4.9 ('23년<sup>e</sup>) 3.9
  - 종합소득세는 26.7조원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세가 경상GDP성장률과 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대비 1.2조원(4.9%) 상승할 전망
    - 경상/실질GDP성장률(%): ('21년) 6.7/4.1 ('22년<sup>e</sup>) 4.7/2.5 ('23년<sup>e</sup>) 4.6/2.1
  - 양도소득세는 27.7조원으로,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 대비 2.5조원(△8.3%) 감소할 전망
    - 기준금리 추이(%): ('22.5.) 1.75 ('22.7.) 2.25 ('22.8.) 2.50 ('22.10.) 3.00

5) 이하 '예산안'은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을 의미한다.

6) 이하 '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 법인세는 106.0조원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22년 법인영업실적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2022년 대비 3.7조원(3.6%)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88.6조원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22년 법인의 영업실적이 2021년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되어 2022년 대비 2.1조원(2.5%) 증가할 전망
    - 증권사 컨센서스(코스피): 2022년 영업이익 226.6조원(전년 대비 2.7%)
  - 법인세 원천분은 17.4조원으로, 시장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6조원(9.9%) 증가할 전망
    - 회사채 금리 전망(3년물, AA-, %): ('21년) 2.1 ('22년<sup>e</sup>) 3.8, ('23년<sup>e</sup>) 3.5
- 부가가치세는 82.7조원으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과 소비관련 경제지표의 완만한 증가로 인해 2022년 대비 2.6조원(3.2%)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표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로 증가율이 완만할 전망
    - 실질 민간소비 증감률(전년 대비, %): ('22년<sup>e</sup>) 3.7 ('23년<sup>e</sup>) 2.4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 ('22년<sup>e</sup>) 5.2 ('23년<sup>e</sup>) 3.3
    - 통관수입 증감률(전년 대비, %): ('22년<sup>e</sup>) 18.4 ('23년<sup>e</sup>) 1.1
  -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1.8조원) 요인으로 작용
    - 지방소비세율: ('21년) 21%('22년) 23.7% ('23년) 25.3%(+1.6%p)
- 기타 소비세수는 40.4조원으로,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 등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2022년 전망(39.3조원) 대비 1.1조원(2.9%) 증가할 전망
  - 개별소비세는 10.3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유연탄 소비량 증가 전망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1.1조원(12.6%) 증가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4조원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유류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 대비 0.0조원(0.1%) 증가에 그칠 전망
  - 관세는 10.8조원으로, 통관기준 수입액의 완만한 증가 전망에 따라 2022년 대비 0.1조원(0.8%) 증가할 전망
    - 통관기준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2년<sup>e</sup>) 18.4 ('23년<sup>e</sup>) 1.1

□ 기타 자산세수는 38.0조원으로, 자산시장 부진과 함께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5.7조원(△13.1%) 감소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6.5조원으로, 고액자산가 사망에 따른 상속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1.1조원(7.2%) 증가할 전망
- 증권거래세는 3.9조원으로,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7조원(△41.0%) 감소할 전망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 → 0.05, 코스닥 0.23 → 0.20
- 종합부동산세는 5.7조원으로,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2조원(△16.9%) 감소할 전망

[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4.9	400.5	399.4	4.6	1.2	△1.0	△0.3
일반회계	384.2	390.3	390.0	5.8	1.5	△0.3	△0.1
내국세	350.6	358.0	357.3	6.7	1.9	△0.6	△0.2
1. 소득세	129.5	131.9	132.4	2.9	2.2	0.5	0.4
2. 법인세	102.3	105.0	106.0	3.7	3.6	1.0	0.9
3. 상속증여세	15.4	17.1	16.5	1.1	7.2	△0.6	△3.6
4. 부가가치세	80.1	83.2	82.7	2.6	3.2	△0.5	△0.6
5. 개별소비세	9.2	10.2	10.3	1.1	12.6	0.1	1.1
6. 증권거래세	6.5	5.0	3.9	△2.7	△41.0	△1.1	△22.4
7. 인 지 세	0.8	0.8	0.8	0.0	△3.7	△0.0	△0.9
8. 과년도수입	6.8	4.8	4.8	△2.0	△29.8	0.0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1.1	11.4	0.0	0.1	0.2	2.0
관 세	10.7	10.7	10.8	0.1	0.8	0.1	0.5
교 육 세	4.6	4.7	4.8	0.2	4.1	0.1	1.9
종합부동산세	6.9	5.7	5.7	△1.2	△16.9	△0.0	△0.0
특별회계	10.7	10.2	9.4	△1.3	△11.8	△0.8	△7.5
주 세	3.5	3.2	3.1	△0.3	△9.1	△0.1	△2.0
농어촌특별세	7.2	7.0	6.3	△0.9	△13.1	△0.7	△1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2.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399.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400.5조원)을 1.0조원 하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3년 경상GDP성장률 전망이 각각 4.6%와 4.5%로 유사한 편
    - '23년 실질/경상GDP성장률 전망(%): (NABO) 2.1 / 4.6 (정부) 2.5 / 4.5
  - 이는 소득세(0.5조원)와 법인세(1.0조원)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를 정부보다 1.1조원 낮게 전망(농어촌특별세 포함시 1.8조원)한 것에 주로 기인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3 예산안 (A)	증감률 (2022 추경 예산 대비)	2023 전망 (B)	증감률 (2022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400.5	1.0	399.4	1.2	△1.0	△0.3
일반회계	390.3	1.0	390.0	1.5	△0.3	△0.1
내국세	358.0	1.7	357.3	1.9	△0.6	△0.2
1. 소득세	131.9	3.1	132.4	2.2	0.5	0.4
2. 법인세	105.0	0.9	106.0	3.6	1.0	0.9
3. 상속증여세	17.1	7.7	16.5	7.2	△0.6	△3.6
4. 부가가치세	83.2	4.9	82.7	3.2	△0.5	△0.6
5. 개별소비세	10.2	0.5	10.3	12.6	0.1	1.1
6. 증권거래세	5.0	△34.0	3.9	△41.0	△1.1	△22.4
7. 인지세	0.8	△13.9	0.8	△3.7	△0.0	△0.9
8. 과년도수입	4.8	△22.1	4.8	△29.8	0.0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2.2	11.4	0.1	0.2	2.0
관세	10.7	6.6	10.8	0.8	0.1	0.5
교육세	4.7	△0.5	4.8	4.1	0.1	1.9
종합부동산세	5.7	△33.7	5.7	△16.9	△0.0	△0.0
특별회계	10.2	△2.1	9.4	△11.8	△0.8	△7.5
주세	3.2	△14.0	3.1	△9.1	△0.1	△2.0
농어촌특별세	7.0	4.6	6.3	△13.1	△0.7	△1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III. 2022~2026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

#### 1.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하나 동 기간 중 경상GDP 성장률 전망(연평균 4.2%)을 하회
  -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법인세의 향후 증가율이 둔화(연평균 2.0%)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기타 자산세수가 감소(연평균  $\Delta 2.5\%$ )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
  -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도 국세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 ('23~'26년 합계)  $\Delta 56.4$ 조원
- 소득세는 2022년 129.5조원에서 2026년 164.5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및 경상GDP 증가율 둔화로 증가율이 2025년 고점에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의 하강국면 진입으로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양도소득세 연평균 증가율(%): ('17~'21년) 24.8 → ('22~'26년) 0.5
- 법인세는 2022년 102.3조원에서 2026년 110.9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금리 인상 등 수익성 악화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예년 대비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 ('17~'21년) 4.4 → ('22~'26년) 2.0

- 부가가치세는 2022년 80.1조원에서 2026년 94.7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
  - 2023년은 민간소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낮은 증가율(3.2%)을 보일 전망
  - 2024년부터 이후 기간은 민간소비를 상회하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부가가치세 연평균 증가율(%): ('22~'23년) 3.2 ('23~'26년) 4.6
- 기타 세목은 2022년 83.0조원에서 2026년 83.7조원으로 연평균 0.2% 증가에 그칠 전망
  -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39.3조원에서 2026년 44.1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경기 부진과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2022년 43.7조원에서 2026년 39.6조원으로 연평균 2.5% 감소할 전망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25년) 0.0  
코스닥 ('22년) 0.23 ('23년) 0.20 ('25년) 0.15

[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2~'26	'17~'21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3.5	6.7
소득세	129.5	132.4	141.1	152.9	164.5	6.2	11.0
법인세	102.3	106.0	104.5	107.0	110.9	2.0	4.4
부가가치세	80.1	82.7	87.3	91.1	94.7	4.3	1.5
기타 <sup>1)</sup>	83.0	78.4	80.3	81.4	83.7	0.2	8.4
- 기타 소비세수	39.3	40.4	41.8	43.1	44.1	3.0	△0.01
- 기타 자산세수	43.7	38.0	38.5	38.3	39.6	△2.5	20.4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2022~2026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22년 396.6조원에서 2026년 459.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정부보다 1.0~6.8조원 낮고, 5년 합계 21.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차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 감소규모를 정부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2조원 크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
    - '22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망:  
(정부) '22~'26년 합계 △47.2조원 (NABO) '22~'26년 합계 △56.4조원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2024년부터 정부 전망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2-26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94.9 (14.8)	399.4 (1.2)	413.2 (3.4)	432.3 (4.6)	453.8 (5.0)	(3.5)
	경상성장률	4.7	4.6	4.3	4.1	3.9	(4.2)
정부	국세수입	396.6 (15.3)	400.5 (1.0)	418.8 (4.6)	439.2 (4.9)	459.9 (4.7)	(3.8)
	경상성장률	5.2	4.5	4.2	4.2	4.0	(4.2)
NABO-정부		△1.8	△1.0	△5.6	△6.8	△6.1	[△21.3]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 I.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1.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10월 현재 시점에서의 거시경제 여건과 2022년 8월까지의 국세수입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 국세수입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하에서는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 여건과 2022년 국세수입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거시경제 여건

2022년 우리 경제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대내외 통화 긴축기조 강화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전년 대비 4.1% 성장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하며 경기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증가세가 확대(4.1%)되었다가 2022년 하반기에 증가율이 둔화되어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비용 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문제로 2022년 상반기(건설투자  $\Delta$ 4.5%, 설비투자  $\Delta$ 6.4%)에 이어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2년 연간 각각 4.9%,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거래는 통관수출액의 경우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증가율이 2021년 25.7%에서 2022년 9.9%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액의 경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높은 수입단가가 유지됨에 따라 2021년 31.5%, 2022년 상반기 2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22년 연간 18.4%로 증가율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환율 상승, 소비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2021년 2.5%, 2022년 상반기 4.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2년 연간으로 전년 대비 5.2%의 상승률이 전망된다.

금리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기조에 따라 회사채(3년 만기, AA-) 기준 2021년 2.1%에서 2022년 상반기 3.4%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2년 연평균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한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2021년 37만명 증가에서 크게 확대되며 전년 대비 8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22년 거시경제 여건

(단위: %)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sup>o</sup>	연간 <sup>o</sup>
실질GDP 성장률	4.1	3.0	2.1	2.5
민간소비	3.7	4.1	3.2	3.7
건설투자	△1.6	△4.5	△1.6	△2.9
설비투자	9.0	△6.4	△3.5	△4.9
경상수지(억달러)	883	339	11	350
통관수출 증가율	25.7	15.6	4.8	9.9
통관수입 증가율	31.5	26.3	11.5	18.4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2.5	2.2	2.2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4.6	5.7	5.2
취업자수 증가(만명)	37	94	△14	80
실업률	3.7	3.2	2.8	3.0
명목임금 상승률	4.6	5.8	4.1	4.9
국고채금리(3년)	1.4	2.7	3.3	3.0
회사채금리(3년, AA-)	2.1	3.4	4.3	3.8
경상GDP 성장률	6.7	5.2	4.3	4.7

주: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는 실적치,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2년 국세수입 전망에 앞서 금년의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289.3조원으로 전년동기(248.2조원) 대비 41.0조원(16.5%)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세목별로 세수 실적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91.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1.9조원(15.0%)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세가 명목임금 상승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3조원(26.7%) 증가한 것과 종합소득세가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8조원(41.1%)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5조원(△5.8%)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8월 누적 기준 82.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7.7조원(50.4%) 증가하며 전체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전년도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와 원천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기준 58.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2조원(7.7%)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관세도 통관수입액 증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7.4조원이 수납되며 전년동기 대비 1.8조원(32.7%) 증가하였다.

반면,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리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함에 따라 8월 누적 기준 4.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6조원(△35.9%) 감소하였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8월 누적 기준 7.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3.9조원(△33.6%) 감소하였다.

[표 2] 2022년 8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1~8월 누적				'21	'22
	'21.8	'22.8	증감액	'21.8	'22.8	증감액	증감률	실적	추경예산
국세	24.6	28.3	3.7	248.2	289.3	41.0	16.5	344.1	396.6
○ 소득세	7.8	10.4	2.6	79.2	91.1	11.9	15.0	114.1	127.8
- 종합소득	0.6	1.6	0.9	11.6	16.3	4.8	41.1	16.0	21.6
- 양도소득	3.9	3.8	△0.2	26.0	24.5	△1.5	△5.8	36.7	34.2
- 근로소득	2.4	4.1	1.8	31.1	39.4	8.3	26.7	47.2	58.0
○ 법인세	13.2	17.0	3.8	54.9	82.5	27.7	50.4	70.4	104.1
○ 상속증여세	1.2	1.1	△0.1	10.9	11.1	0.3	2.6	15.0	15.9
○ 부가가치세	△3.2	△4.6	△1.4	54.1	58.3	4.2	7.7	71.2	79.3
○ 증권거래세	1.0	0.5	△0.5	7.3	4.7	△2.6	△35.9	10.3	7.5
○ 교통에너지환경세	1.4	0.9	△0.5	11.7	7.7	△3.9	△33.6	16.6	10.9
○ 관세	0.8	0.9	0.1	5.6	7.4	1.8	32.7	8.2	10.1
○ 기타	2.3	2.1	△0.2	24.7	26.4	1.7	7.0	38.3	4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2022년 국세수입 전망

### 가.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세수입을 394.9조원으로, 2021년(344.1조원) 대비로는 50.8조원(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영업실적 호조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통관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sup>1)</sup>한다. 한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396.6조원) 보다는 1.8조원(△0.4%), 2022년 9월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397.1조원)보다는 2.2조원(△0.6%)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2021년(114.1조원) 대비 15.4조원(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증가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2021년 사업소득 증가와 전년도에 납부유예되어 금년에 수납된 이연세수 등으로 2021년 대비 9.5조

1) 한편,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세정지원 등으로 납부유예되어 2022년에 수납된 9.8조원을 감안하면 2022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준이다.

원(59.5%)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 역시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 회복세와 임금 상승률 확대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11.6조원(24.5%)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양도 소득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토지 및 주택의 매매 거래건수 감소로 2021년 대비 6.5조원(△1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102.3조원으로, 2021년(70.4조원) 대비 31.9조원(4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글로벌 수요회복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sup>2)</sup> 법인세 원천분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 및 법인실적 호조에 따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80.1조원으로, 2021년(71.2조원) 대비 8.9조원(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통관수입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가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21년 21% → '22년 23.7%) 등 제도변화로 세수 증가세가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sup>3)</sup>는 민간소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2021년 대비 각각 5.2조원(△31.6%), 0.2조원(△2.2%) 감소할 전망이다.

기타 자산세수<sup>4)</sup> 중 증권거래세는 6.5조원으로 금리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하여 2021년 대비 3.7조원(△3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금년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세수증가 요인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로 세수증가세가 제약되어 2021년 대비 0.7조원(12.2%) 증가한 6.9조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 국세수입은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로는 1.8조원(△0.4%)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와 환율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감소 규모를 정부보다 더 크게 보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금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2) 2021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6% 증가하였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1.6% 증가하였다.

3)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4)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60%),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제도적 요인도 일부 작용하여 추경예산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22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44.1	396.6	394.9	50.8	14.8	△1.8	△0.4
일반회계	332.5	386.2	384.2	51.7	15.5	△2.1	△0.5
내국세	296.4	351.9	350.6	54.2	18.3	△1.3	△0.4
1. 소득세	114.1	127.8	129.5	15.4	13.5	1.6	1.3
2. 법인세	70.4	104.1	102.3	31.9	45.3	△1.8	△1.7
3. 상속증여세	15.0	15.9	15.4	0.4	2.6	△0.5	△3.2
4. 부가가치세	71.2	79.3	80.1	8.9	12.5	0.8	1.0
5. 개별소비세	9.4	10.1	9.2	△0.2	△2.2	△1.0	△9.7
6. 증권거래세	10.3	7.5	6.5	△3.7	△36.3	△1.0	△13.3
7. 인 지 세	1.0	0.9	0.8	△0.1	△12.5	△0.1	△11.5
8. 과년도수입	5.1	6.2	6.8	1.7	32.8	0.7	11.1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0.9	11.4	△5.2	△31.6	0.5	4.2
관 세	8.2	10.1	10.7	2.5	30.0	0.6	6.3
교 육 세	5.1	4.7	4.6	△0.5	△9.9	△0.1	△2.7
종합부동산세	6.1	8.6	6.9	0.7	12.2	△1.7	△20.2
특별회계	11.6	10.4	10.7	△0.9	△7.6	0.3	2.7
주 세	2.7	3.7	3.5	0.8	29.6	△0.3	△7.3
농어촌특별세	8.9	6.7	7.2	△1.7	△18.7	0.6	8.3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세목별 전망

### (1) 소득세

2022년 소득세는 129.5조원으로, 2021년(114.1조원) 대비 15.4조원(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127.8조원을 1.6조원(1.3%)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중간예납 납기 연장에 따른 이연세수 및 소비회복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및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표 4] 2022년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14.1	127.8	129.5	15.4	13.5	1.6	1.3
신고분	52.7	55.8	55.8	3.1	5.8	0.0	0.0
종합소득세	16.0	21.6	25.5	9.5	59.5	3.9	18.3
양도소득세	36.7	34.2	30.3	△6.5	△17.6	△4.0	△11.6
원천분	61.4	72.1	73.7	12.3	20.0	1.7	2.3
이자소득세	2.2	2.6	2.3	0.1	3.7	△0.4	△13.3
배당소득세	4.6	4.3	4.3	△0.4	△7.6	△0.1	△1.2
사업소득세	3.7	3.6	4.1	0.4	12.0	0.5	14.9
근로소득세	47.2	58.0	58.8	11.6	24.5	0.8	1.5
연금소득세	0.3	0.3	0.4	0.1	27.9	0.1	22.7
기타소득세	1.9	1.9	2.2	0.3	14.5	0.3	17.7
퇴직소득세	1.4	1.4	1.7	0.2	15.5	0.3	21.6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근로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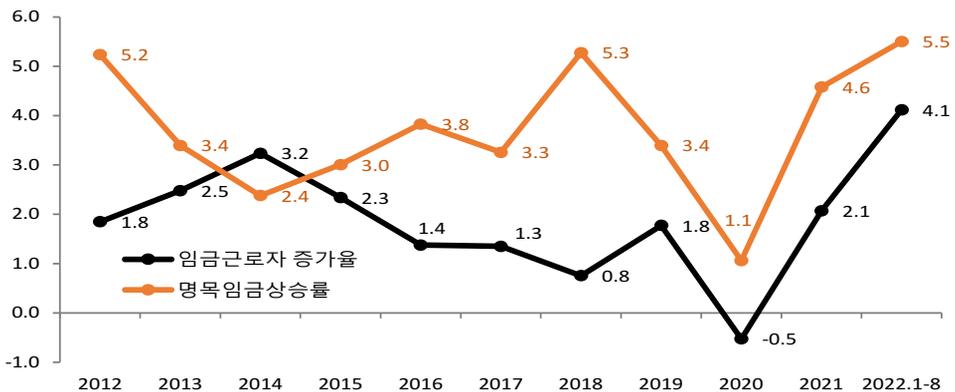
2022년 근로소득세는 58.8조원으로, 2021년(47.2조원) 대비 11.6조원(2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58.0조원을 0.8조원(1.5%)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수전망은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최근의 양호한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39.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8.3조원(26.7%) 증가하였다. 이는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와 임금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용시장은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2020년은 임금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회복세가 2022년에는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금년 1~8월 중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85만명(4.1%) 증가했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 수는 85만명(5.7%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연간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수 증가(임금근로자 42만명, 상용근로자 37만명)의 두 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그림 1]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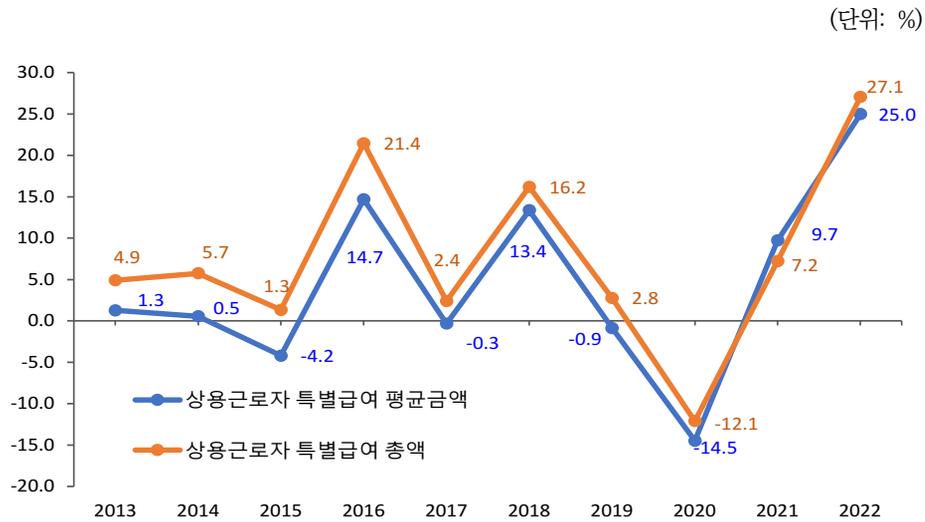
주: 2022.1~8월의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동기간 중 평균 임금근로자 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1~7월 평균 명목임금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을 나타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금년 1~8월 중 임시근로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0.4만명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수는 10.5만명 감소했다.

한편, 명목임금 상승률도 2022년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4.6%)보다 높은 5.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업의 성과급이 대체로 연말 또는 연초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21.12월~'22.2월의 월별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평균값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금년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 특별급여액에 월별 상용근로자 수를 곱해 추정한 특별급여 총액의 증가율도 27.1%로 전년(7.2%)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그림 2]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



주: 1.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평균금액은 1인당 특별급여 증가율로 t-1년도 12월, t년도 1~2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액 단순평균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총액 증가율은 t-1년도 12월, t년도 1~2월의 상용근로자 평균 특별급여액에 당월 상용근로자수를 곱해 추정한 특별급여 총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종합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는 25.5조원으로, 2021년(16.0조원) 대비 9.5조원(5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21.6조원을 3.9조원(18.3%)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높은 증가세는 이연세수<sup>6)</sup>와 금년 종합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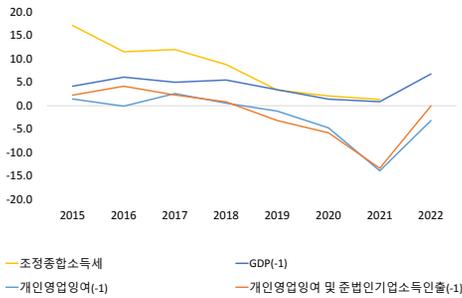
6) 금년 종합소득세 수납실적에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

2021년 사업소득 증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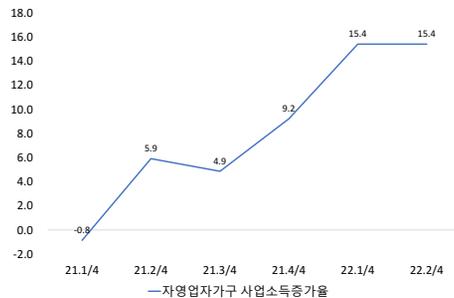
먼저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6.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8조원(41.1%) 증가하였다. 이는 상반기까지 납부된 이연세 수와 2021년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증가로 5월부터 확정신고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22년 종합소득세 증가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2022년 종합소득세의 과세베이스가 되는 사업소득 및 개인영업잉여가 2021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양호한 고용회복과 임금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한 민간 소비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 데 기인한다. 우선,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13.3%에서 2021년 0.0%로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상 자영업자 가구의 분기별 전년동기 대비 사업소득 증가율이 '21년 1분기까지 감소세에서 '21년 2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 종합소득세 국민계정상 과세베이스 (단위: %)



[그림 4] 자영업자 가구 사업소득 증가율 (단위: %)



주: 조정 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 EITC· CTC감안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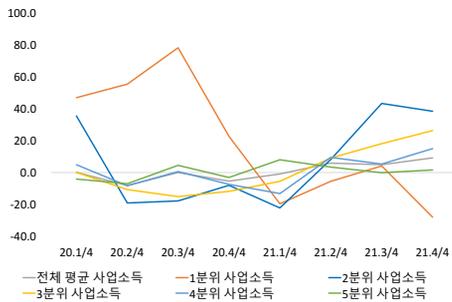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21.11. → '22.2.)함에 따른 이연세수 2.7조원(정부 추정치)이 포함되어 있다.  
 7) 이연세수를 제외할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전년 대비 증가율은 59.5%에서 28.9%로 하락한다.

둘째, 예상보다 빠른 사업소득 상승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0~2021년간 가계동향조사의 분위별 사업소득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21.4분기에도 음의 증가율을 보이나, 이 외의 소득분위의 경우 양의 증가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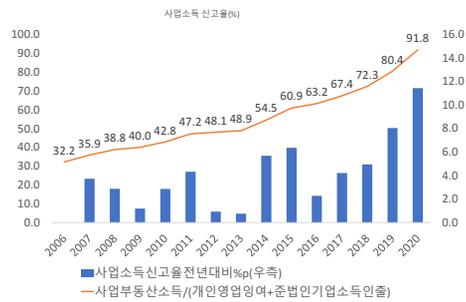
셋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거래와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 등으로 사업소득 신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업소득 신고율은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대비 국세통계의 사업소득 비율로 계산되며, 2019년 80.4%에서 2020년 91.8%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업소득 신고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 2018년 5.0%p에서, 2019년 8.0%p, 2020년 11.4%p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5] 자영업자 가구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6]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과표양성화 지표  
(단위: %, %p)



자료: 한국은행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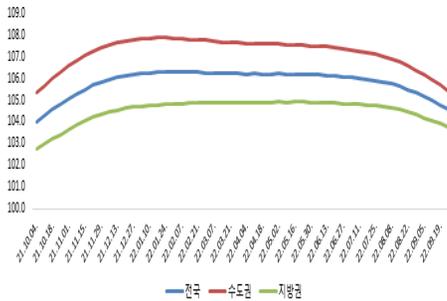
2022년 양도소득세는 30.3조원으로 2021년(36.7조원) 대비 6.5조원(△17.6%) 감소하여, 추경예산(34.2조원)을 4.0조원(△11.6%)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자산시장 위축으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24.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5조원(△5.8%) 감소하였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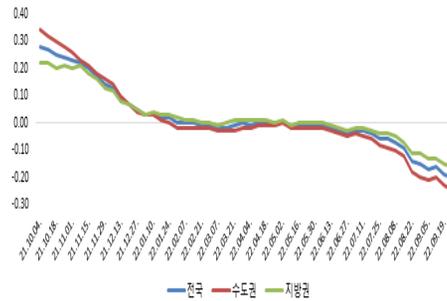
량의 감소에 기인한다.8)

부동산 가격의 경우 2022년 9월 26일 기준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하락했고, 2022년 8월 기준 종합주택은 전월 대비 매매가격이 0.29%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주택은 2022년 1~8월간 40.7만호(매매 및 분양권)가 거래되어 전년동기 대비 48.2% 감소했으며, 토지는 2022년 1~8월간 133.1만 필지가 거래되어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했다.

[그림 7]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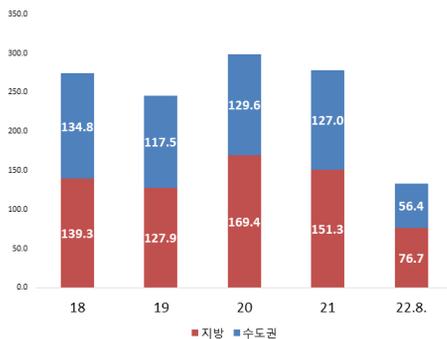


[그림 8]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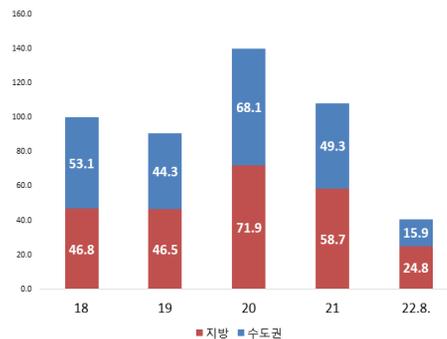


주: 1. 2021.6.28.의 지수(100)를 기준으로 '21.10.4.~'22.9.26.을 포함  
 2. 조사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주간조사 결과는 월간조사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주간, 아파트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9] 토지거래량 연도별 추이  
(단위: 만필지)



[그림 10] 주택거래량 연도별 추이  
(단위: 만호)



주: 매매와 분양권 합계, 2018~2021년은 시점별 12월 누적 기준이며, 2022년은 8월 누적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양도소득세 중 국내 주식분은 2월, 해외 주식분은 5월,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장외시장 거래 비상장법인 주주의 예정신고분은 8월에 납입되므로, 2022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수의 감소는 6월 및 7월 세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22년의 경우 6월 및 7월의 세수가 2021년 동월 대비 1.2조원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 추세는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7월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2.5%(5년 평균 대비 △19.0%) 감소했으며, 동행지표인 7월 주택 착공실적 또한 전년동기 대비 16.8%(5년 평균 대비 △17.6%) 감소하였다.<sup>9)</sup> 이에 더하여 기준금리 인상 및 거래 심리위축<sup>10)</sup> 등이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sup>11)</sup>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거래량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된다.<sup>12)</sup>

##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 세목 중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여타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소득세는 2.3조원으로, 2021년(2.2조원) 대비 0.1조원(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2.6조원을 0.4조원(△13.3%) 하회하는 수치이다. 이자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6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03조원(△2.2%) 감소하였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6월부터 월별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배당소득세는 4.3조원으로, 2021년(4.6조원) 대비 0.4조원(△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4.3조원을 0.1조원(△1.2%) 하회하는 금액이다. 배당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3.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3조원(△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배당소득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2021년 귀속 배당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하락(코스피·코스닥 시장 △11.8%<sup>13)</sup>)한 것에 기인

9) 기타 공급 관련 지표 또한 하락세를 보인다. 미분양 주택은 '22년 7월말 기준 전월 대비 12.1% 증가한 3.1만호이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월 대비 3.6% 증가한 7,388호이다.

10) KB매수우위지수: ('22.8.8) 25.6 → ('22.9.26.) 19.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2.7.) 93.6 → ('22.8.) 89.4

11) House prices-at-Risk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근래의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한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가 최근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8.3.).

12) 구조적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유동성지표인 금리와 통화량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통화량지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다. 또한 AR(1)항을 포함한 시계열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때 아파트매매가격은 서울 2.1%p, 수도권 1.7%p, 지방광역시 1.1%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2.9.5.).

13) 다만 이는 2020년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실시한 특별배당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증가율이다.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1%로 나타난다. 이에 후술할 2023년 배당소득세는 등 특이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다. 또한, 하반기 법인영업실적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배당액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업소득세는 4.1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2021년(3.7조원) 대비 0.4조원(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3.6조원을 0.5조원(14.9%)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 밖에 기타소득세(2.2조원), 연금소득세(0.4조원), 퇴직소득세(1.7조원)는 8월 실적의 증가세가 1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 법인세

2022년 법인세는 102.3조원으로, 2021년(70.4조원) 대비 31.9조원(4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04.1조원)을 1.8조원(△1.7%)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86.4조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대비 31.0조원(55.8%) 증가하고, 추경예산(87.6조원)을 1.2조원(△1.4%)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원천분은 15.9조원으로 2021년 대비 0.9조원(6.2%) 증가하여 추경예산(16.4조원)을 0.6조원(△3.5%)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5] 2022년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70.4	104.1	102.3	31.9	45.3	△1.8	△1.7
- 신고분	55.5	87.6	86.4	31.0	55.8	△1.2	△1.4
- 원천분	14.9	16.4	15.9	0.9	6.2	△0.6	△3.5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2년 월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8월 누적 기준으로 71.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7.1조원(61.1%) 증가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신고분의 높은 증가세는 2021년 법인 영업실적의 호조로 2022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sup>14)15)</sup>

14) 법인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3~5월 당월기준 수납액을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로 3월 9.5조원(57.2%), 4월 10.5조원(126.5%), 5월 2.1조원(43.2%) 증가하였다.

[표 6] 2022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기준, 202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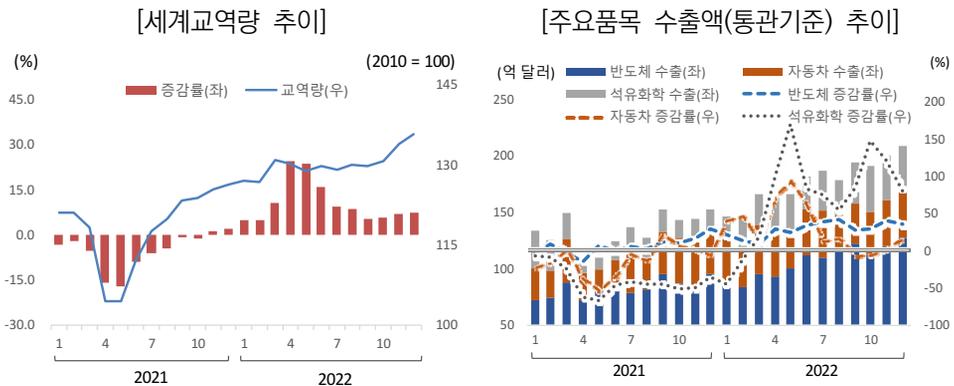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1	0.6	0.2	16.6	8.3	4.9	0.7	0.8	12.4	44.4
2022	1.4	0.2	26.0	18.9	7.0	1.3	0.6	16.1	71.5
차이	0.8	0.1	9.5	10.5	2.1	0.6	△0.2	3.8	27.1
(%)	(134.3)	(35.1)	(57.2)	(126.5)	(43.2)	(76.8)	(△20.2)	(30.3)	(61.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법인영업실적은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며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세계교역량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021년 통관 수출액은 6,444억달러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다.

[그림 11] 세계교역량 및 주요 품목 수출액 추이



자료: CPB, 한국무역협회 통계

그 결과 2021년 유가증권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73.6%,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비롯하여 화학, 서비스업, 철강·금속, 운수장비 순으로 세전순이익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15)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8~10월에 납부가 이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용 가능한 8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 8월 법인세는 전년동월 대비 3.8조원(28.8%) 증가한 17.0조원이 수납되었다.

16) 2021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 상위 5개 업종(조원): 전기전자(30.1), 화학(24.0), 서비스업(18.2), 철강·금속(12.5), 운수장비(9.1)

[표 7] 유가증권상장사 실적 증감률: 2017~2021년

(단위: 전년 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유가증권 상장기업 (연결기준)	영업이익	28.2	0.3	-37.0	3.2	73.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9.5	-3.2	-50.0	9.4	121.6

자료: 한국거래소(유가증권 상장사 실적)

전체 외부감사 법인으로 분석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러한 2021년 법인실적의 호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외감법인의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9.7%, 1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고분 법인세의 높은 증가세는 이러한 2021년 법인영업실적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표 8] 외감법인(비금융업) 실적 증감률: 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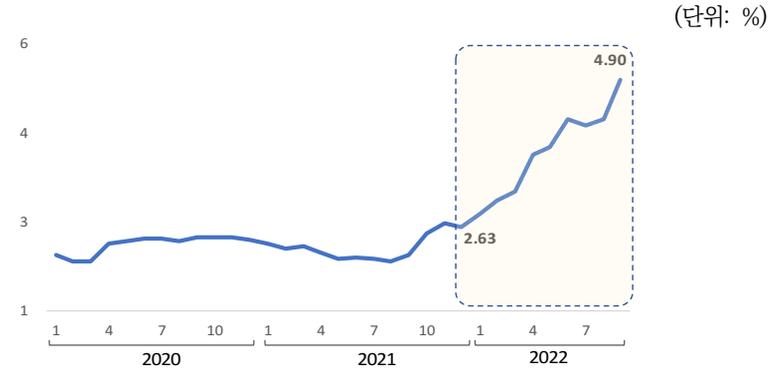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경영분석 <sup>1)</sup>	영업이익	22.9	△3.9	△25.6	0.1	89.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4.4	△9.0	△30.4	3.8	133.4 <sup>1)</sup>

주: 1) 2017~2020년은 비금융업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2021년(잠정)은 비금융업 외감법인 기준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법인세 원천분은 8월 누적 기준으로 11.0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5조원 (5.2%)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의 금리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채 금리(3년물, AA-)는 2020년 연평균 2.13%, 2021년 2.1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1월 2.63%에서 2022년 9월 4.9%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장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연간 원천분 법인세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2] 회사채(3년물, AA-) 금리 추이: 2020.1. ~ 2022.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3) 부가가치세

2022년 부가가치세는 80.1조원으로, 2021년(71.2조원) 대비 8.9조원(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79.3조원)을 0.8조원(1.0%)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9] 2022년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71.2	79.3	80.1	8.9	12.5	0.8	1.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8.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2조원(7.7%)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국내분 세수는 19.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조원(△22.3%) 감소하였으나<sup>17)</sup>, 수입분 세수는 38.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8조원(33.8%) 증가하였다. 한편, 2022년의 지방소비세율 인상(21% → 23.7%)을 감안<sup>18)</sup>하여 지방소비세를 포함할 경우 2022년 전체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내분 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19.6% 감소하고 수입분 세수는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2021년 10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납부유예로 금년 수납된 세수는 약 2.6조원 수준이다.

18)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국세 감소 규모는 2.8조원 수준이다.

[표 10] 2021년 및 2022년의 8월 누적 기준 부가가치세 징수액 현황

(단위: 조원, %)

	2021년 8월 누적			2022년 8월 누적		
	전체	국내분	수입분	전체	국내분	수입분
부가가치세 징수액(국세 기준)	54.1	25.1	29.0	58.3	19.5	38.8
- 증감률(국세 기준)	18.1	10.3	25.9	7.7	△23	33.8
- 증감률(지방소비세 포함) <sup>1)</sup>	18.1	10.3	25.9	11.5	△19.6	38.5

주: 1)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수는 국세 기준 세수에 지방소비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활용

1. 지방소비세율은 2020~2021년 21%, 2022년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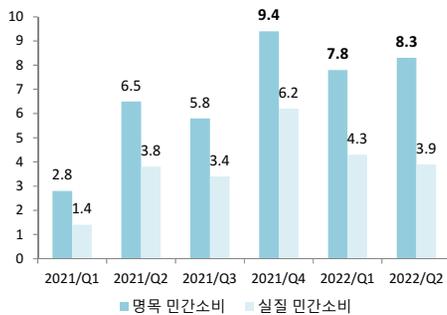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의 부가가치세 증가는 과세 기반인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도 3~4분기 국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차년도 1월에 신고·납부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021년 하반기 이후 명목 민간소비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4%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2022년 1분기 7.8%, 2분기 8.3%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명목 민간소비의 증가는 방역정책의 전환으로 소비·생산 등의 경제 활동이 전년보다 활발해지면서 서비스업 부문 등의 매출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도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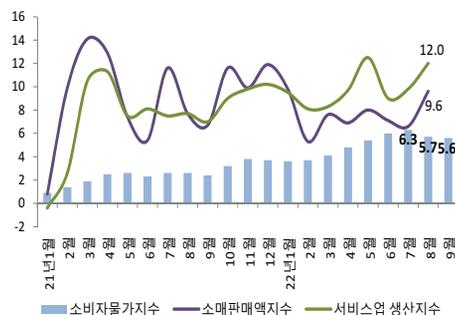
[그림 13] 명목 민간소비 관련 변수의 추이: 2021~2022년

(단위: %, 전년동월 대비)

명목 및 실질 민간소비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및 부문별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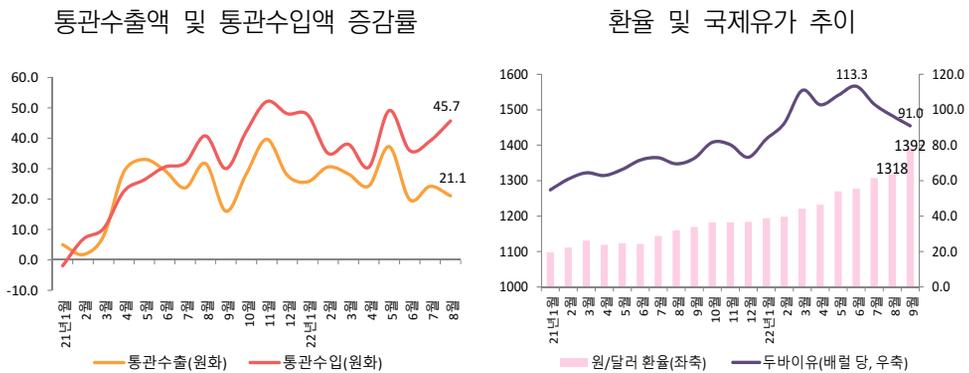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통관수입액(원화기준)은 2022년 8월 전년동월 대비 45.7%까지 확대되었다. 통관 수입액의 확대는 최근 유류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통관수입 시 적용되는 환율의 상승<sup>19)</sup>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통관수출도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21.1%의 증가하며 부가가치세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4] 수출 및 수입 관련 변수의 추이: 2021~2022년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한국석유공사(Petronet)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기타 소비세수

2022년 부가가치세 외 기타 소비세수<sup>20)</sup>는 39.3조원으로, 2021년(42.0조원) 대비 2.7조원(△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예산(39.6조원)을 0.3조원(△0.8%)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수감소 전망은 관세가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증가로 2021년 대비 2.5조원(3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21년 대비 각각 0.2조원(△2.2%), 5.2조원 감소(△31.6%)할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19) 원/달러 환율(월별 평균)은 1월 1,194원에서 8월 1,318원까지 상승하였다.

20) 이하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및 주세의 세수를 포함한다.

[표 11] 2022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42.0	39.6	39.3	△2.7	△6.4	△0.3	△0.8
개별소비세	9.4	10.1	9.2	△0.2	△2.2	△1.0	△9.7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0.9	11.4	△5.2	△31.6	0.5	4.2
관세	8.2	10.1	10.7	2.5	30.0	0.6	6.3
기타 <sup>1)</sup>	7.8	8.5	8.1	0.3	3.7	△0.4	△4.7

주: 1) 기타는 교육세와 주세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개별소비세

2022년 개별소비세는 9.2조원으로 2021년(9.4조원) 대비 0.2조원(△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0.1조원)을 1.0조원(△9.7%)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6.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1조원(△1.0%)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에 기인한다.<sup>21)</sup> 2022년 개별소비세는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전망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2022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4조원으로 2021년(16.6조원) 대비 5.2조원(△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0.9조원)을 0.5조원(4.2%)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7.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3.9조원(△33.6%) 감소하였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를 인하여 기인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수준을 금년 5월 20%(당초 탄력세를 기준)에서 30%로, 7월에는 37%로 확대하였다. 2022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전망하였다.

21) 2022년 중 구체적인 유류세율 변화는 「표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2]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변화

기간	적용 세율			
	인하폭	휘발유분	경유분	부탄가스분
2021년 11월 ~ 2022년 4월	△20%	423.0원/L	300.0원/L	220.0원/kg
2022년 5월 ~ 6월	△30%	370.0원/L	263.0원/L	193.0원/kg
2022년 7월 ~ 12월	△37%	332.5원/L	238.0원/L	176.4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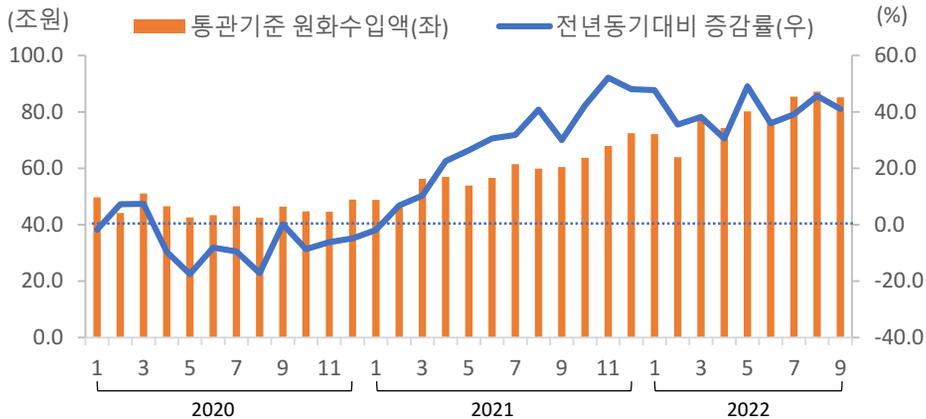
주: 당초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부탄가스 275원/kg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관세

2022년 관세는 10.7조원으로, 2021년(8.2조원) 대비 2.5조원(3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예산(10.1조원)을 0.6조원(6.3%)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관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7.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32.7%)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세의 증가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증가에 기인한다. 2022년 연간 관세 전망은 8월까지의 징수실적에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15]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금액 및 증감 추이



주: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은 월별 통관기준 수입액(달러)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월별 원/달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2년 양도소득세 외 기타 자산세수<sup>22)</sup>는 43.7조원으로, 2021년(46.4조원) 대비 2.7조원(△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예산(45.8조원)을 2.1조원(△4.6%)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산세수의 전년 대비 감소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금리 인상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주식거래 둔화로 2021년 대비 3.7조원(△3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데 기인한다.

[표 13] 2022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1 실적 (A)	2022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46.4	45.8	43.7	△2.7	△5.8	△2.1	△4.6
상속·증여세	15.0	15.9	15.4	0.4	2.6	△0.5	△3.2
증권거래세	10.3	7.5	6.5	△3.7	△36.3	△1.0	△13.3
종합부동산세	6.1	8.6	6.9	0.7	12.2	△1.7	△20.2
기타 <sup>1)</sup>	15.0	13.8	14.9	△0.1	△0.6	1.1	8.2

주: 1) 기타는 인지세 및 농특세, 과년도수입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상속·증여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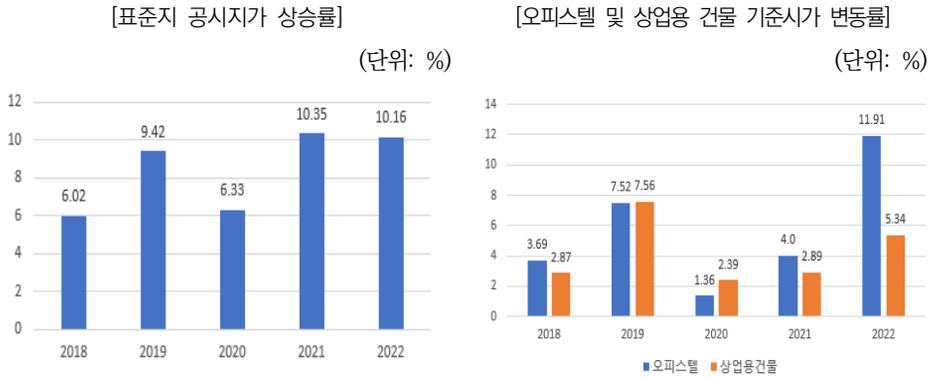
2022년 상속·증여세는 15.4조원으로, 2021년(15.0조원) 대비 0.4조원(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15.9조원을 0.5조원(△3.2%) 하회하는 수준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는 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15.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는 7.4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8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8조원(15.8%) 증가하였다. 상속세의 증가는 자산평가액에 과세하는 세목 특성상 최근의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2) 이하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세수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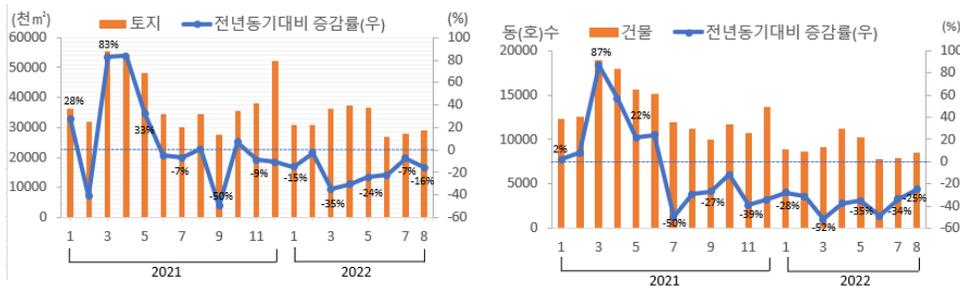
[그림 16]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 추이



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국평균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여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증여거래가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하였다. 2022년 8월까지 증여거래는 토지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9.0%, 건물은 전년동기 대비 36.4% 감소하였다.

[그림 17] 부동산 유형별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21. 1.~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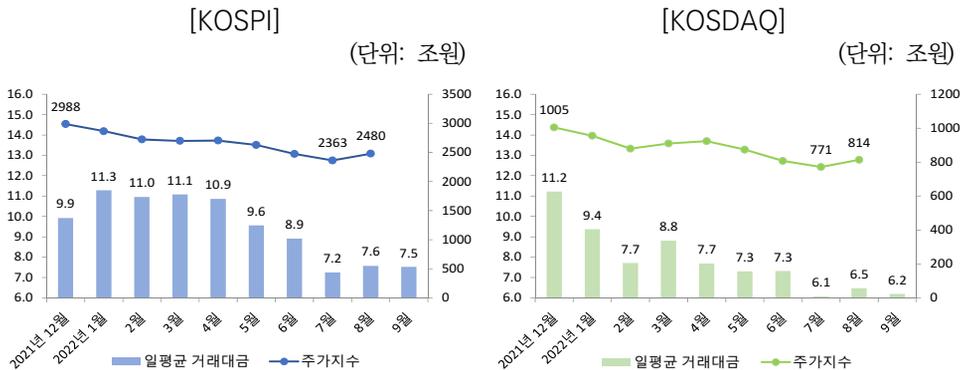
주: 토지는 면적기준이며, 건물은 동(호) 기준임  
 자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원인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권거래세

2022년 증권거래세는 6.5조원으로, 2021년(10.3조원) 대비 3.7조원(△3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7.5조원을 1.0조원(△13.3%)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2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4.7조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6조원(△35.9%) 감소한 금액이다. 증권거래세의 감소는 증권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2년 8월 기준 거래대금 누적액은 코스피 1,732조원, 코스닥 1,3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4.6%, 38.2% 감소하였다. 일평균 증권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추세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2022년 1월 11.3조원에서 9월 7.5조원으로, 코스닥은 1월 9.4조원에서 9월 6.2조원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권거래대금 감소세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증권거래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8] 월별 증권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2021. 12. ~ 2022. 9.



주: 8~9월 거래대금은 일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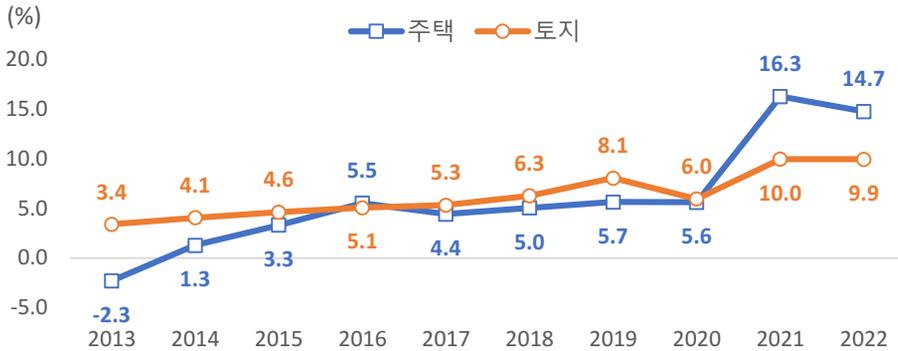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종합부동산세

2022년 종합부동산세는 6.9조원으로, 2021년(6.1조원) 대비 0.7조원(1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6조원)을 1.7조원(△20.2%) 하회한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주택 14.7%, 토지 9.9%)으로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2013~2022년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40%p 하향됨에 따라 세수증기율은 2021년 70.3%에서 1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체취득 및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합산배제,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제도 변화도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추이

구분		2009	2010	2011~2018	2019	2020	2021	2022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	80%			85%	90%	95%	60% <sup>1)</sup>
	토지	70%	75%	80%	85%	90%	95%	100%

주: 1) 2022년 8월 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으로 기존 100%에서 60%로 40%p 하향 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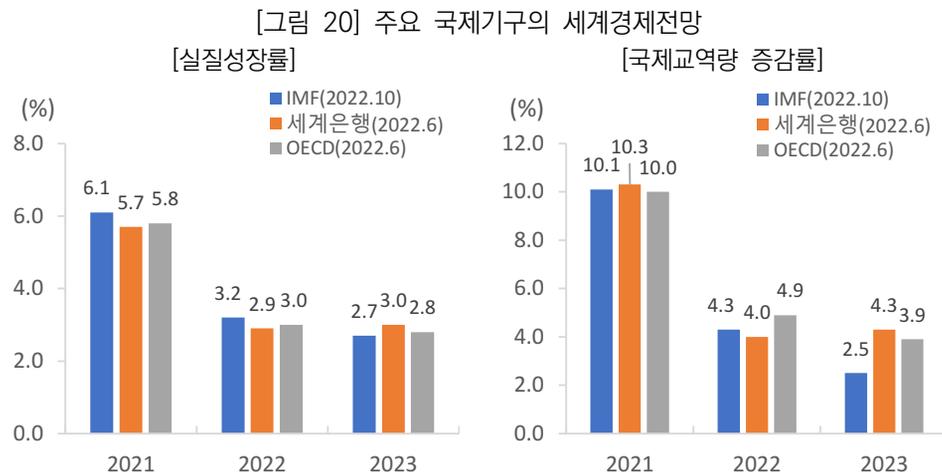


## II.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1. 2023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2023년 우리 경제는 2022년에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강화 등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통화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모두 2022년을 밑돌게 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IMF,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2.9~3.2%에서 2023년 2.7~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sup>23)</sup>. 국제교역량 증가율도 2022년 4.0~4.9%에서 2023년 2.5~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23)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실질성장률을 이전 전망 대비 하향 조정하였다. IMF는 2022년 7월 전망 대비 2023년 0.2%p, 세계은행은 2022년 1월 전망 대비 2022년 1.2%p, 2023년 0.2%p, OECD는 2021년 12월 전망 대비 2022년 1.5%p, 2023년 0.4%p 하향 조정하였다.

2023년 실질GDP 성장률은 2.1%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2년 연간 2.5% 수준으로 전망되었던 성장률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세 둔화와 실질 구매력 약화, 금리 상승 등에 따라 2022년 3.7% 대비 1.3%p 낮은 2.4%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2022년 대비 0.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비주거용 건축이 경기둔화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3기 신도시 사업 착공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한다. 설비투자는 2022년 대비 1.2%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세계 반도체 업황의 악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계획 축소 등에 기인한다.

대외거래는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통관수출과 통관수입 모두 2022년 수준에서 증가율(통관수출 0.5%, 통관수입 1.1%)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5.2%에서 증가세가 둔화되며 3.3%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망에 기인한다.

2023년 국고채(3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및 양적 긴축기조 지속으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3년, AA-)금리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등으로 2022년 대비 0.3%p 하락한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22년 증가세(전년 대비 80만명 증가)의 기저효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전년 대비 9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임금은 실질GDP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상승 및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4)</sup>

---

24) 구체적인 거시경제 지표 전망에 대한 설명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5]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실질GDP 성장률	△0.7	4.1	2.5	2.1
민간소비	△5.0	3.7	3.7	2.4
건설투자	△0.4	△1.6	△2.9	0.4
설비투자	7.1	9.0	△4.9	1.2
경상수지(억달러)	759	883	350	320
통관수출 증가율	△5.5	25.7	9.9	0.5
통관수입 증가율	△7.1	31.5	18.4	1.1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6	2.5	2.2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2.5	5.2	3.3
취업자수 증감(만명)	△22	37	80	9
명목임금 상승률	1.1	4.6	4.9	3.9
국고채금리(3년)	1.0	1.4	3.0	3.0
회사채금리(3년, AA-)	2.1	2.1	3.8	3.5
경상GDP 성장률	0.8	6.7	4.7	4.6

주: 2021년은 실적치, 2022년 및 2023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가. 총괄

2023년도 국세수입은 399.4조원으로, 2022년(394.9조원)<sup>25)</sup> 대비 4.6조원(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부진으로 관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변화 요인도 국세수입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32.4조원으로, 2022년(129.5조원) 대비 2.9조원(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및 임금근로자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는 106.0조원으로, 2022년(102.3조원) 대비 3.7조원(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법인 영업실적은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영업실적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법인세수도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82.7조원으로, 2022년(80.1조원) 대비 2.6조원(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개선,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sup>26)</sup>으로 인한 제도적 요인으로 세수 증가율은 완만할 전망이다.

기타 세목은 대부분의 세목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7조원(△4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으로 2022년 대비 1.2조원(△16.9%) 감소할 전망이다.

25) 이하 '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26) 2021년 세법개정으로 당시 21%였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22년 23.7%, '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399.4조원)은 정부의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400.5조원)을 1.0조원(△0.3%)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0.5조원)와 법인세(1.0조원)가 정부 예산안을 상회하지만, 증권거래세 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정부보다 1.1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농어촌특별세 포함시 1.8조원)한 것에 기인한다.

[표 16]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4.9	400.5	399.4	4.6	1.2	△1.0	△0.3
일반회계	384.2	390.3	390.0	5.8	1.5	△0.3	△0.1
내국세	350.6	358.0	357.3	6.7	1.9	△0.6	△0.2
1. 소득세	129.5	131.9	132.4	2.9	2.2	0.5	0.4
2. 법인세	102.3	105.0	106.0	3.7	3.6	1.0	0.9
3. 상속증여세	15.4	17.1	16.5	1.1	7.2	△0.6	△3.6
4. 부가가치세	80.1	83.2	82.7	2.6	3.2	△0.5	△0.6
5. 개별소비세	9.2	10.2	10.3	1.1	12.6	0.1	1.1
6. 증권거래세	6.5	5.0	3.9	△2.7	△41.0	△1.1	△22.4
7. 인 지 세	0.8	0.8	0.8	0.0	△3.7	△0.0	△0.9
8. 과년도수입	6.8	4.8	4.8	△2.0	△29.8	0.0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1.1	11.4	0.0	0.1	0.2	2.0
관 세	10.7	10.7	10.8	0.1	0.8	0.1	0.5
교 육 세	4.6	4.7	4.8	0.2	4.1	0.1	1.9
종합부동산세	6.9	5.7	5.7	△1.2	△16.9	△0.0	△0.0
특별회계	10.7	10.2	9.4	△1.3	△11.8	△0.8	△7.5
주 세	3.5	3.2	3.1	△0.3	△9.1	△0.1	△2.0
농어촌특별세	7.2	7.0	6.3	△0.9	△13.1	△0.7	△1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나. 세목별 전망

### (1) 소득세

2023년 소득세는 132.4조원으로, 2022년(129.5조원) 대비 2.9조원(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131.9조원을 0.5조원(0.4%) 상회하는 수준이다. 임금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주택 가격 및 주택·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표 17] 2023년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29.5	131.9	132.4	2.9	2.2	0.5	0.4
신고분	55.8	54.4	54.5	△1.3	△2.3	0.0	0.1
종합소득세	25.5	24.7	26.7	1.2	4.9	2.0	8.2
양도소득세	30.3	29.7	27.7	△2.5	△8.3	△2.0	△6.6
원천분	73.7	77.4	77.9	4.2	5.7	0.5	0.6
이자소득세	2.3	2.7	2.8	0.5	20.2	0.1	2.5
배당소득세	4.3	5.0	4.7	0.4	9.9	△0.3	△5.1
사업소득세	4.1	4.5	4.5	0.4	8.7	△0.1	△1.7
근로소득세	58.8	60.6	61.6	2.8	4.7	1.0	1.6
연금소득세	0.4	0.5	0.5	0.1	26.2	△0.0	△7.5
기타소득세	2.2	2.5	2.4	0.2	8.7	△0.0	△2.0
퇴직소득세	1.7	1.6	1.5	△0.2	△9.1	△0.1	△7.9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근로소득세

2023년 근로소득세는 61.6조원으로, 2022년(58.8조원) 대비 2.8조원(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60.6조원을 1.0조원(1.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근로소득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경제 전망」의 고용 시장 전망을 토대로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인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을 비롯하여

실효세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였다. 「2023년 및 중기경제 전망」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수는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23년부터 경기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sup>27)</sup>된다.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추이에 따라 2022년 4.9%, 2023년 3.9%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23년은 경기둔화에 따라 임금근로자 수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되고, 임금상승세도 둔화되면서 세수 증가율은 2022년(24.5%)보다는 낮은 증가율(4.7%)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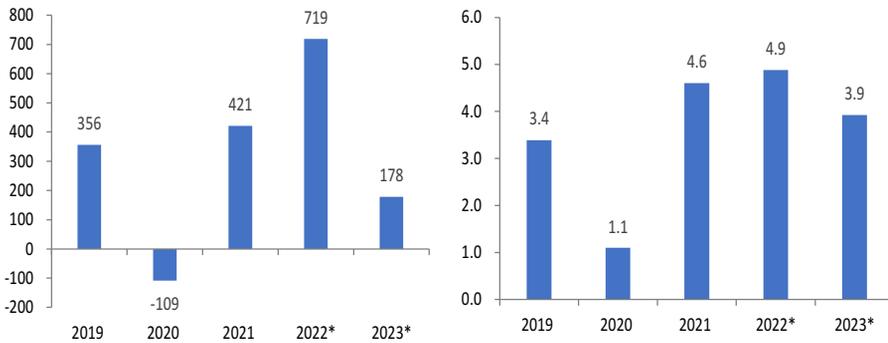
[그림 21]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전망

[임금근로자 증감]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천명)

(단위: %)



주: 2022년과 2023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경제 전망」

최근 10년(2012~2021년)의 근로소득세 연평균 증가율이 9.9%인 것에 비하여 2023년 증가율(4.7%)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와 영향을 비롯하여 2023년부터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분(세수효과)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며, 이에 따라 2023년 현행 대비 2.6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23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9.2%

27)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전망(%): ('21년) 2.1 → ('22년<sup>e</sup>) 3.5 → ('23년<sup>e</sup>) 0.8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21년) 4.9 → ('22년<sup>e</sup>) 4.9 → ('23년<sup>e</sup>) 3.9  
 근로소득세 증가율 전망(%): ('21년) 15.5 → ('22년<sup>e</sup>) 24.5 → ('23년<sup>e</sup>)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5년 고용시장 지표와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8]의 조정근로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수에서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포함한 실적으로, 근로소득세 변동 추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감효과를 제거한 실적을 살펴보았다.

근로소득세 실적에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 조정, 공제제도 개편 등 제도변화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소득세 변동 추이와 고용시장 변동 추이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3.4%→1.1%)되었던 2020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도 5%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다음 연도에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이 상승하자 근로소득세 증가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22년은 전년도보다 임금 상승 및 고용 증가 추세가 확대되고, 특별급여 증가 요인까지 더해져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3년은 기저효과의 영향과 함께 경기둔화로 고용 및 임금 상승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고용시장 지표와 근로소득세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조정근로소득세수 (EITC 미차감 기준, 십억원)	39,054	41,971	43,958	50,335	61,796	67,103
(증감액, 십억원)	3,987	2,917	1,987	6,377	11,460	5,308
(증가율, %)	11.4	7.5	4.7	14.5	22.8	8.6
임금상승률(%)	5.3	3.4	1.1	4.6	4.9	3.9
임금근로자 수(천명)	20,084	20,440	20,332	20,753	21,472	21,650
(임금근로자수 증감, 천명)	150	356	△108	421	719	178
(상용근로자수 증감, 천명)	345	444	305	366	-	-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	0.8	1.8	△0.5	2.1	3.5	0.8

주: 1. 2022년과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조정근로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감효과를 제거한 근로소득세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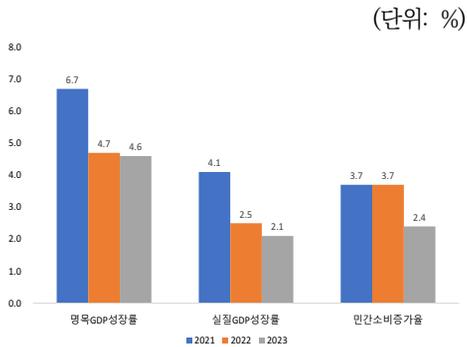
## 종합소득세

2023년 종합소득세는 26.7조원으로, 2022년(25.5조원) 대비 1.2조원(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8)</sup> 이는 정부 예산안(24.7조원)을 2.0조원(8.2%)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종합소득세의 과세베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2022년 경상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sup>29)</sup>를 살펴보면, 이들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만 증가율<sup>30)</sup>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2.10)에 따르면,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6.7%에서 2022년 4.7%로 하락하고,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4.1%에서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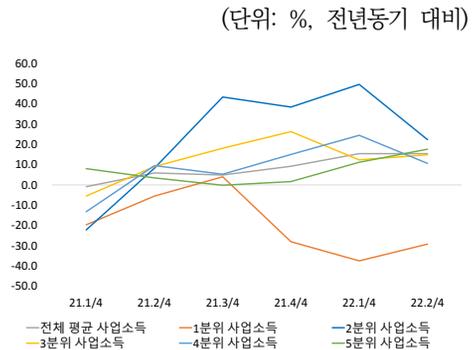
추가로 2023년 종합소득세의 기반이 되는 2022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고소득층인 5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음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며, 소득 2분위와 4분위의 경우 2022년 2분기 들어 전년동기 대비 사업소득 증가세의 확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23년 종합소득세를 전망하였다.

[그림 22]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2022.10.

[그림 23] 자영업자 가구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감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8) 2022년 전망에서 코로나에 따른 납부유예로 인해 전년에서 이월된 이연세수 2.7조원을 차감한 후 2023년의 전년 전망 대비 증가율을 재계산하면 17.3%로 전년의 증가율(28.9%)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2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2022.10.5.

30) 이연세수를 감안한 증가율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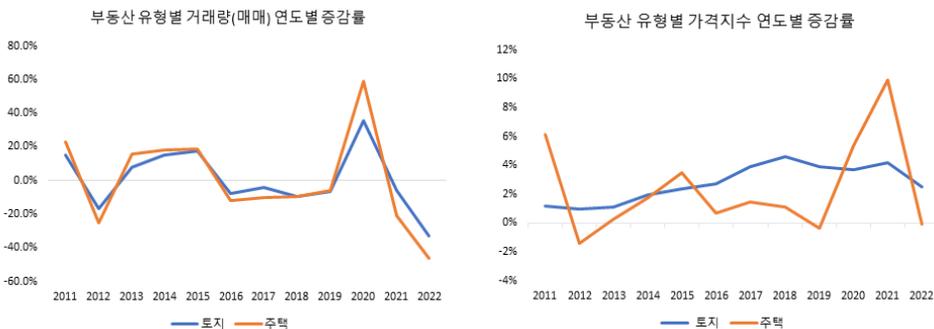
또한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도 변화로 인해 2023년 0.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세수감소 요인은 EITC·CTC 확대(△0.4조원), 기부금세액공제율 한시 상향(△0.1조원) 등이다.<sup>31)</sup>

## 양도소득세

2023년 양도소득세는 27.7조원으로, 2022년(30.3조원) 대비 2.5조원(△8.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9.7조원)을 2.0조원(△6.6%)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의 양도소득세는 최근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반영하되 과거 양도소득세 월별 징수실적 및 증감률 추이 등을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부동산 매매가격의 경우 토지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sup>32)</sup>되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도 2022년 하락한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택 거래량은 2022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기준금리 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유예기간 종료(2023년 5월 9일)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으로 2023년 거래량은 2022년 수준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4]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 및 가격지수의 연도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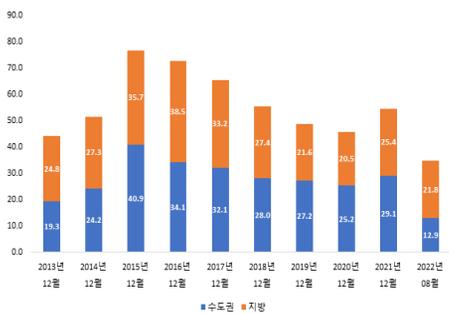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 2022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항목 중 세수효과가 가장 큰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의 종합소득세분(△0.8조원)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가 차년도에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32) 토지 가격지수 증감률(전년 대비, %): ('18년) 4.6 ('19년) 3.9 ('20년) 3.7 ('21년) 4.2 ('22.8월)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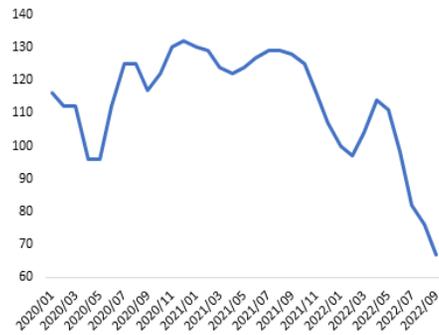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자산시장 둔화 및 하방요인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금리 수준<sup>33)</sup>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매매·전세 수급지수 순환변동의 수축단계 재진입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건설업 수익성 악화 등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4)</sup>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sup>35)</sup> 또한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인·허가 실적 감소가 두드러진다. 최근 주택가격 전망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6)</sup> 상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자산시장은 2022년 하반기의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망에 반영했다.

[그림 25]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추이  
(단위: 만동)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6] 주택가격전망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월별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3)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26.) 1.75% ('22.7.13.) 2.25% ('22.8.25.) 2.5% ('22.10.12.) 3.0%

34)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매매·전세가격 순환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 저점은 2023년 3월~2024년 2월, 전세가는 2025년 2월로 예상되어 주택시장 침체가 향후 2년 내외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2022년 3/4분기, 2022.9.).

35) 주택공급은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단계로 거치므로 인·허가실적은 자산시장(주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36)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 중 하나로, 기준값(100)보다 작으면 장기평균보다 향후 주택가격 전망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 소득세 기타

이자소득세는 2023년 2.8조원으로, 2022년(2.3조원) 대비 0.5조원(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2.7조원을 0.1조원(2.5%)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회사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개인예금 잔액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당소득세는 2023년 4.7조원으로, 2022년(4.3조원) 대비 0.4조원(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5.0조원을 0.3조원(△5.1%) 하회한다. 최근 법인의 배당 증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경상GDP, 회사채 금리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9.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업소득세는 2023년 4.5조원으로, 2022년(4.1조원) 대비 0.4조원(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예산안 4.5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2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기타소득세는 2023년 2.4조원으로, 2022년(2.2조원) 대비 0.2조원(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예산안 2.5조원을 0.05조원(△2.0%) 하회한다. 2023년 기타소득세는 2021~2022년 기타소득세의 GDP탄력성(경상GDP 성장률 대비 기타소득세 증가율)을 적용하여 일차적으로 기타소득세를 전망한 후, 2022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입을 전망하였다.

연금소득세는 2023년 0.5조원으로, 2022년(0.4조원) 대비 0.1조원(2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 예산안 0.5조원보다 0.04조원(△7.5%)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연금소득세는 6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2019년 이후 연금소득세 증가율 둔화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는 2023년 1.5조원으로, 2022년(1.7조원) 대비 0.2조원(△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 예산안 1.6조원을 0.1조원(△7.9%) 하회한다. 2023년 퇴직소득세의 감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확대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 (2) 법인세

2023년 법인세는 106.0조원으로, 2022년(102.3조원) 대비 3.7조원(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05.0조원)을 1.0조원(0.9%) 초과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88.6조원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2.1조원(2.5%) 증가하여 정부 예산안(87.1조원)을 1.5조원(1.7%)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천분은 17.4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9.9%) 증가하여 정부 예산안(17.9조원)을 0.5조원(△2.8%)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2023년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102.3	105.0	106.0	3.7	3.6	1.0	0.9
- 신고분	86.4	87.1	88.6	2.1	2.5	1.5	1.7
- 원천분	15.9	17.9	17.4	1.6	9.9	△0.5	△2.8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3년 법인세의 기반이 되는 2022년 법인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1%, 16.7% 증가했으며, 법인세차감전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하였다.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 비중을 나타내는 세전순이익률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한 8.3%로 나타나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실적흐름을 보였다.<sup>37)</sup>

외감법인의 경우에도 2022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

37) 해당 실적에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1~2분기 당기순이익 △10.8조원)를 포함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하여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한전은 법인세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을 제외하고 상장사의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0%, 30.9% 증가하였다.

대비 17.0%, 20.5%으로 나타났으며, 세전순이익률은 7%를 상회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표 20] 기업 경영 실적 추이

(단위: %)

	상장법인(한국거래소) <sup>1)</sup>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0	2021	2022 상반기	2020	2021 <sup>2)</sup>	2022 <sup>3)</sup>	
						Q1	Q2
매출액증감률	△3.7	19.8	25.1	△0.6	17.7	17.0	20.5
영업이익증감률	3.2	73.6	16.7	0.1	89.7	-	
세전순이익증감률	9.4	121.6	16.5	3.8	133.4	-	
영업이익률	5.5	8.0	7.9	4.2	6.8	6.3	7.1
세전순이익률	4.5	8.3	8.3	3.9	7.7	8.1	7.2

주: 1)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2022 상반기 실적은 603개사)

2) 전체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정치(10월) 발표 전 외감기업(26,880개) 대상 속보치

3) 기업경영분석 분기 실적은 외감기업 모집단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된 결과임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결산실적',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세부통계(ECOS)'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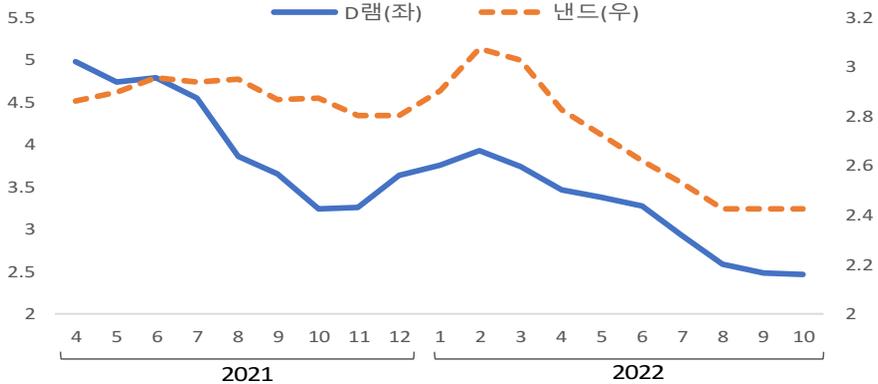
다만, 하반기부터는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메모리 및 낸드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4분기에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sup>38)</sup>, 관련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sup>39)</sup>

38) 시장조사업체(TrendForce)는 D램과 낸드 가격이 4분기에도 전기대비 각각 13~18%, 15~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9) 삼성전자 '22.3분기 영업이익 속보치(2022.10.7.)'는 전년동기 대비 31.7% 감소하였다.

[그림 27] 반도체 가격 추이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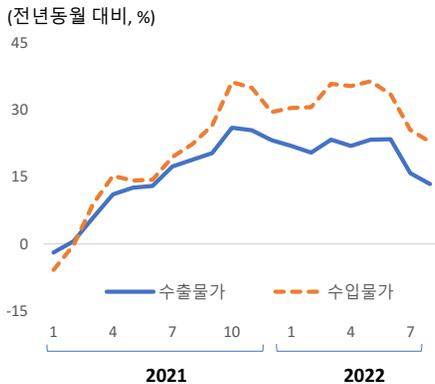
주: D램은 DDR4(8G, 2666Mbps) 기준, 낸드는 3D TLC 256Gb 기준  
 자료: DRAMeXchange

또한 해외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또한 국내 기업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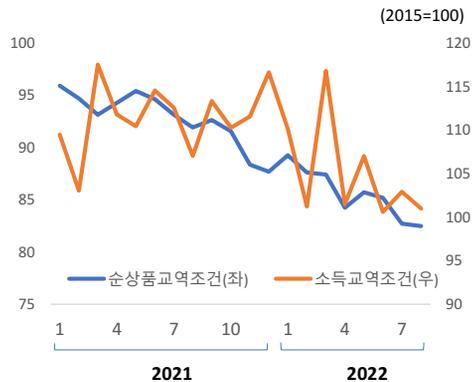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출입물가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입물가 증가율이 수출 물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기업의 경영 실적 개선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8] 수출입 물가지수 및 교역조건: 2021~2022.7.

〈수출입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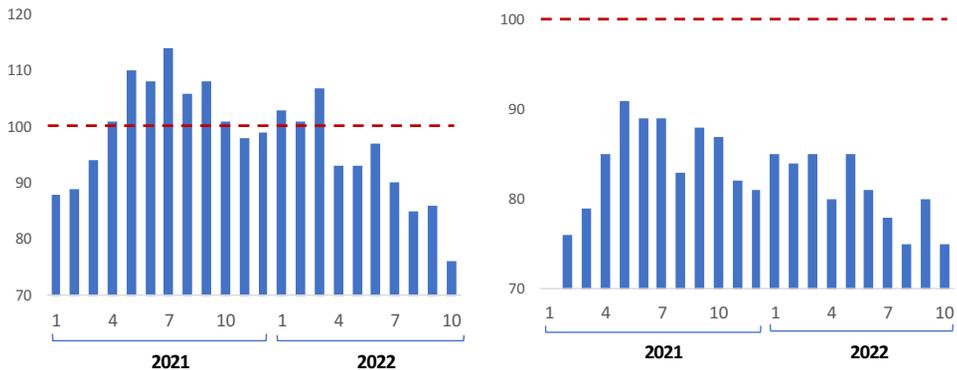
〈교역조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편 기업의 체감경기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sup>40</sup>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0월에는 76까지 감소했으며, 내수법인의 경우에도 2022년 5월 이후 하락세가 관찰된다.

[그림 29]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 추이: 2021. 1. ~ 2022. 10.  
 <수출기업> <내수기업>



주: 붉은 점선(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보다 작을수록 향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종합하면 상반기의 양호한 법인실적 증가를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감소가 상쇄함에 따라 2022년 연간 법인영업 실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0월 12일 기준 증권사의 컨센서스<sup>41</sup>(연결 기준)는 영업이익이 226.6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6.9%), 철강·금속(△9.0%), 건설업(△9.1%)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증권업(△33.4%)의 큰 감소와 전기·가스업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운수장비(120.2%), 운수창고(58.6%), 화학(13.8%)은 전년에 이어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40)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경기 동향 및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로 100보다 크면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업체가 많음을 의미한다.

41) 증권사의 컨센서스란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의 2022년 상반기 실적(연결 기준)과 2022년 10월 12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57개 상장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에서 전망한 2022년 영업이익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표 21] 업종별 증권사 경영실적 전망 평균(컨센서스)

(단위: 조원, %)

섹터	2022년 영업이익(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코스피 전체	226.6	2.7
전기·전자	70.9	△6.9
화학	30.3	13.8
철강·금속	13.5	△9.0
운수장비	20.9	120.2
전기·가스업	△27.7	적자 지속
건설업	3.8	△9.1
운수창고	16.6	58.6
증권	4.9	△33.4

자료: FnGuide(조회일: 2022.10.12.)

### (3) 부가가치세

2023년 부가가치세는 82.7조원으로, 2022년(80.1조원) 대비 2.6조원(3.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83.2조원)을 0.5조원(△0.6%) 하회하는 수준이다.

[표 22] 2023년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80.1	83.2	82.7	2.6	3.2	△0.5	△0.6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sup>42)</sup>으로 인한 세수감소 요인과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관수입 증가율 등 소비관련 지표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2022년 증가율(8.9%)에 비해 낮은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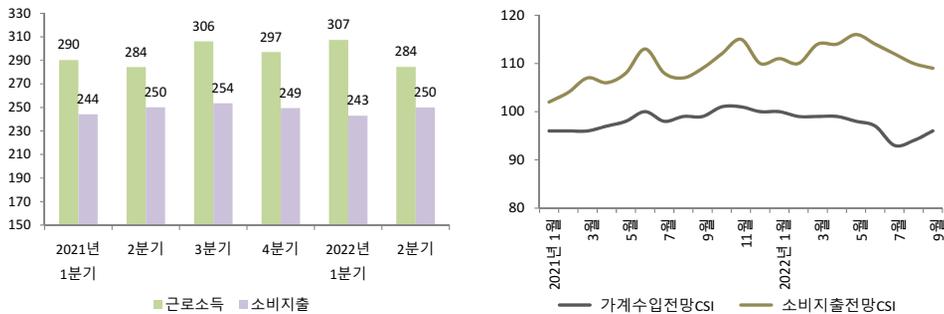
소비 관련 경제지표의 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2년 3.7%

42)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방소비세율이 1.6%p 인상(23.7% → 25.3%)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1.8조원으로 예상된다.

에서 2023년 2.4%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2%에서 3.3%로 하락할 전망이다. 최근의 소비 규모와 관련한 지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구매력 측면에서 가계의 2022년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근로 소득은 1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수입 및 지출액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 역시 5월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 30] 가계 소득 및 소비 동향 관련 조사 결과: 2021~2022년

[가계의 월평균 근로소득 및 소비지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기타 소비세수

2023년 기타 소비세수는 40.4조원으로 2022년 39.3조원 대비 1.1조원(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0.0조원)을 0.4조원(1.0%) 상회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2022년(9.2조원) 대비 1.1조원(12.6%) 증가하고, 관세도 통관기준 수입액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2022년(10.7조원) 대비 0.1조원(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세 둔화 전망에 따라 2022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인 11.4조원으로 예상하였다.

[표 23] 2023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2023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9.3	40.0	40.4	1.1	2.9	0.4	1.0
개별소비세	9.2	10.2	10.3	1.1	12.6	0.1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1.1	11.4	0.0	0.1	0.2	2.0
관세	10.7	10.7	10.8	0.1	0.8	0.1	0.5
기타 <sup>1)</sup>	8.1	7.9	7.9	△0.1	△1.6	0.0	0.3

주: 1) 기타는 교육세 및 주세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개별소비세

2023년 개별소비세는 10.3조원으로, 2022년(9.2조원) 대비 1.1조원(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0.2조원)을 0.1조원(1.1%)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2022년 감소하였던 개별소비세는 2023년에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제 LNG 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LNG 소비량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24] 개별소비세 에너지 주요 과세품목 소비량: 2018~2023년

(단위: 백만배럴, 백만톤(유연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등유	18.9	17.1	17.0	16.7	16.0	15.9
중유	33.7	24.0	23.8	22.3	22.3	22.9
액화석유가스	109.4	122.1	121.3	123.4	141.2	144.1
유연탄(발전용)	90.8	83.6	69.8	68.0	69.8	70.6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부터는 예상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21~2026)」, 2022.

### 교통·에너지·환경세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4조원으로, 2022년(11.4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 예산안(11.1조원)을 0.2조원(2.0%)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망은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2022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제하였다. 또한, 국제유가 전망이 2022년 연평균 \$100.8/bbl에서 2023년은 \$94.7/bbl로 소폭 하락<sup>43)</sup> 하지만 환율 상승 등으로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가가 예상되어 2022년에 시행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2023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전망한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국제 유가 추이

(단위: \$/bbl)



자료: 한국석유공사(Petronet)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관세

2023년 관세는 10.8조원으로, 2022년(10.7조원) 대비 0.1조원(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0.7조원)을 0.1조원(0.5%)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2년의 관세 세수 증가율 30.0%보다 낮은 2023년 관세의 증가율(0.8%)은 통관기준 수입액의 증가세가 2022년 대비 크게 둔화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3년 통관기준 수입액은 국제 유가 및 기타 원자재가격의 소폭 하락 등에 따라 수입 물량은 증가하나, 수입단가가 떨어지면서 2022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43)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및 동절기 에너지 안정공급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2022.10.)

[그림 32]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2011~2023년



주: 2022~2023년 통관수입 증감률은 NABO 전망에 따른 증감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3년 기타 자산세수는 38.0조원으로 2022년(43.7조원) 대비 5.7조원(△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0.4조원)을 2.4조원(△6.0%)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대비 각각 2.7조원(△41.0%) 및 1.2조원(△1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는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조정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증여거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액자산가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1조원(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5] 2023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2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2023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43.7	40.4	38.0	△5.7	△13.1	△2.4	△6.0
상속·증여세	15.4	17.1	16.5	1.1	7.2	△0.6	△3.6
증권거래세	6.5	5.0	3.9	△2.7	△41.0	△1.1	△22.4
종합부동산세	6.9	5.7	5.7	△1.2	△16.9	0.0	0.0
기타 <sup>1)</sup>	14.9	12.6	11.9	△3.0	△20.2	△0.7	△5.5

주: 1) 기타는 인지세 및 농특세, 과년도수입의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상속·증여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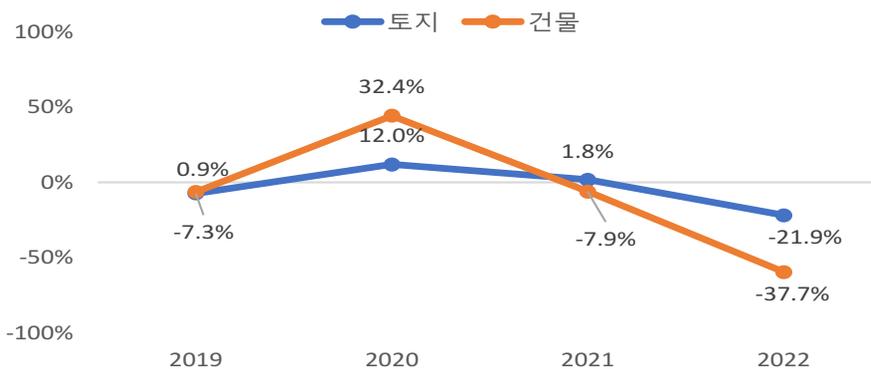
2023년 상속·증여세는 16.5조원으로, 2022년(15.4조원) 대비 1.1조원(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7.1조원)을 0.6조원(△3.6%) 하회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9.3조원으로 2022년 대비 1.3조원(16.0%) 증가하고, 정부 예산안(9.0조원)을 0.4조원(4.3%)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7.2조원으로 2022년 대비 0.2조원(△2.5%) 감소하며, 정부 예산안(8.2조원)을 1.0조원(△12.2%)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의 자산유형별 가액 비중과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였다. 상속세는 자산 유형별로 토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상향계획을 반영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망, 주택은 오피스텔 공시가격 상승률 전망, 유가증권은 상장기업 기준 증권사 컨센서스 지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sup>44)</sup>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자산 유형별 가격 상승률과 함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의 증여거래 건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의 증여거래 건수는 2021년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2022년 8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건물은 2021년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2022년 8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7% 감소하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3]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19~2022.8.



주: 2022년은 8월까지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4) 한편, 상속세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자산가의 사망으로 인한 우발세수의 연부연납분(2.8조원)은 자산가액의 변동과 관계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증권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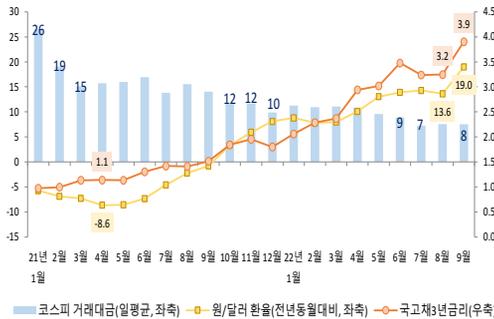
2023년 증권거래세는 3.9조원으로, 2022년(6.5조원) 대비 2.7조원(△4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5.0조원)을 1.1조원(△22.4%)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증권거래대금은 2023년 경제성장 둔화 전망과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및 환율 상승 등에 기인하여 감소할 전망이다.<sup>45)</sup> 이는 금리와 환율의 인상은 주식시장의 신규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이탈을 야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sup>46)</sup>

한편,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권거래세율 인하<sup>47)</sup>도 증권거래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2023년 0.9조원의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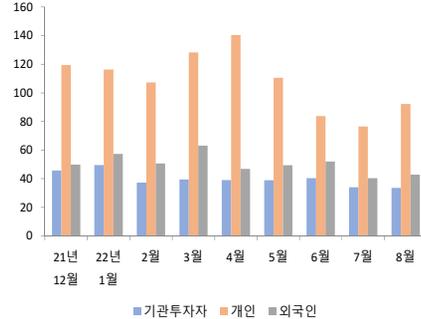
[그림 34] 증권거래대금과 환율·금리 비교

(단위: 조원, %)



[그림 35] 투자자별 주식 매도액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5) 높은 금리 수준은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주식투자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높은 환율 수준은 수출 위주의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국내 자산의 상대적 가치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성과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과거의 예를 들면,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었던 2018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에도 전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5월 1,076원 → 10월 1,123원)하고 주가는 하락(코스피, 5월 2,461 → 12월 2,070)하면서 주식시장이 위축되었다.

46) 추정결과 2023년 거래대금은 3,087조원(코스피 및 코스닥 합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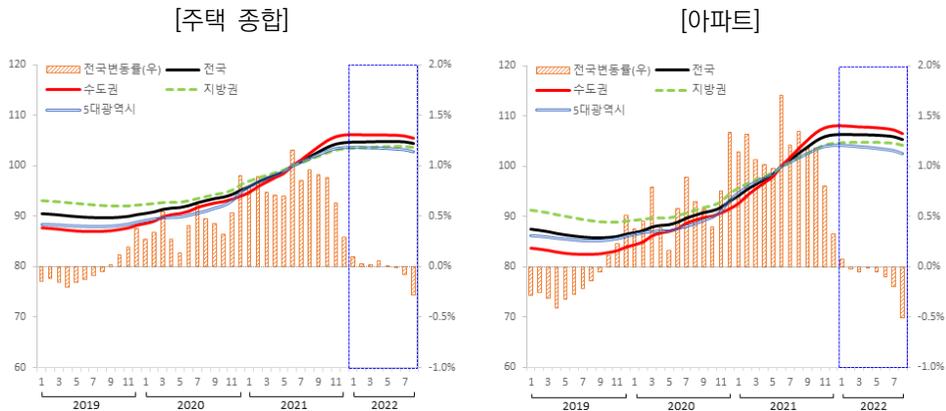
47) 세법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코스피 0.08%, 코스닥 0.23%에서 2023~2024년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0.03%p 인하하고, 이후 2025년 코스피 0% 및 코스닥 0.15%로 0.05%p 인하하는 내용이다

## 종합부동산세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5.7조원으로, 2022년(6.9조원) 대비 1.2조원(△1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5.7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반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은 2022년 부동산 시세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등에 따라 증가율이 결정되는데, 최근 주택의 월간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전망하였다. 최근 주택의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 아파트의 경우 5% 하락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망 시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률(주택 가액별 1~4%, 토지 3%)만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6]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2017.8. ~ 2022.8.



주: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년도는 2021년 6월(2021.6=100)이며, 변동률은 전월대비 변동률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이와 함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인하,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등에 따른 세수감소분(△1.5조원)을 반영하여 2023년 종합부동산세수를 전망하였다.

[표 26] 2022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금액(개인)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그 외) 6억원	·12억원 ·9억원	·6억원	·9억원	
과 표 별 세 율	3억원 이하	0.6%	0.5%	1.2%	0.5%
	3~6억원	0.8%	0.7%	1.6%	0.7%
	6~12억원	1.2%	1.0%	2.2%	1.0%
	12~25억원	1.6%	1.3%	3.6%	1.3%
	25~50억원		1.5%		1.5%
	50~94억원	2.2%	2.0%	5.0%	2.0%
	94억원 초과	3.0%	2.7%	6.0%	2.7%
	법인	3.0%	2.7%	6.0%	2.7%
세부담 상한	150%	(좌동)	300%	150%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399.4조원)은 정부 예산안(400.5조원)보다 1.0조원(△0.3%)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 차이율은 0.3%로 양 기관 모두 2023년 국세수입은 2022년<sup>48)</sup>과 달리 증가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모두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2023년 경제성장률과 GDP 구성항목이 2022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우선 2023년 경상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4.7%에서 소폭 낮아진 4.6%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22년 5.2%에서 0.7%p 낮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외 세부 경제지표도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세수입이 2021년 대비 50.8조원(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22년 국세수입이 2021년 대비 53.0조원(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2년 9월 정부 발표)

[표 27] 2023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1 실적	2022 전망		2023 전망	
		정부	NABO	정부	NABO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6.7 (4.1)	5.2 (2.6)	4.7 (2.5)	4.5 (2.5)	4.6 (2.1)
민간소비증가율	3.7	3.7	3.7	3.2	2.4
설비투자증가율	9.0	△3.0	△4.9	2.7	1.2
건설투자증가율	△1.6	△1.5	△2.9	3.5	0.4
경상수지	883	450	350	560	320
통관수출증가율	25.7	11.0	9.9	1.0	0.5
통관수입증가율	31.5	18.0	18.4	△1.0	1.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4.7	5.2	3.0	3.3
취업자증감	37	60	80	15	9
명목임금상승률	4.6	4.8	4.9	3.2	3.9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양 기관의 세목별 전망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정부가 예산안을 2022년 추경예산(127.8조원) 대비 4.0조원(3.1%) 증액한 131.9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소득세 예산안보다 0.5조원(0.4%) 높은 132.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3년 세입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2년 소득세수 전망이 정부보다 1.6조 원 높게 전망한 것과 고용 관련 지표 전망인 명목임금상승률과 임금근로자수 전망치<sup>49)</sup>가 정부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

법인세는 정부가 예산안을 105.0조원으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1.0조원(0.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예산안보다 1.0조원 (0.9%) 높은 106.0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2022년 하반기 부터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10월 초까지의 증권사 컨센서스를<sup>50)</sup> 반영하여 소폭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예산안은 83.2조원으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3.9조원(4.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대비 0.5조원(△0.6%) 낮은 82.7조

49)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23년, %): 정부 3.2, NABO 3.9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전망('23년, %): 정부 0.5, NABO 0.8

50) 증권사 컨센서스(코스피, '22.10.12. 조회): 2022년 영업이익 226.6조원(전년 대비 2.7% 증가)

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2.4%)이 정부 전망(3.2%)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다.

기타 세목 중에서는 증권거래세 전망에서 양 기관의 전망 차이가 큰 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예산안을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6조원(△34.0%) 감소한 5.0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는 금리와 환율 상승 전망 등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시장요인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0.03%p 인하의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거래대금 감소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정부보다 크게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수를 예산안보다 1.1조원 낮은 3.9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다.<sup>51)</sup>

[표 28]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3 예산안 (A)	증감률 (2022 추경 예산대비)	2023 전망 (B)	증감률 (2022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400.5	1.0	399.4	1.2	△1.0	△0.3
일반회계	390.3	1.0	390.0	1.5	△0.3	△0.1
내국세	358.0	1.7	357.3	1.9	△0.6	△0.2
1. 소득세	131.9	3.1	132.4	2.2	0.5	0.4
2. 법인세	105.0	0.9	106.0	3.6	1.0	0.9
3. 상속증여세	17.1	7.7	16.5	7.2	△0.6	△3.6
4. 부가가치세	83.2	4.9	82.7	3.2	△0.5	△0.6
5. 개별소비세	10.2	0.5	10.3	12.6	0.1	1.1
6. 증권거래세	5.0	△34.0	3.9	△41.0	△1.1	△22.4
7. 인지세	0.8	△13.9	0.8	△3.7	△0.0	△0.9
8. 과년도수입	4.8	△22.1	4.8	△29.8	0.0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2.2	11.4	0.1	0.2	2.0
관세	10.7	6.6	10.8	0.8	0.1	0.5
교육세	4.7	△0.5	4.8	4.1	0.1	1.9
종합부동산세	5.7	△33.7	5.7	△16.9	△0.0	△0.0
특별회계	10.2	△2.1	9.4	△11.8	△0.8	△7.5
주세	3.2	△14.0	3.1	△9.1	△0.1	△2.0
농어촌특별세	7.0	4.6	6.3	△13.1	△0.7	△1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51) 증권거래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감안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1.8조원 낮게 전망하고 있다.



### Ⅲ. 2022~2026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1. 2022~2026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2022~2026년 거시경제는 2022~2023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잠재GDP 수준에 부합하는 경로로 점차 회귀하여 실질GDP 기준으로 2017~2021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2022	2023	2024	2025	2026	(단위: %)	
						연평균 증가율 '22~'26	'17~'21
실질GDP 성장률	2.5	2.1	2.3	2.3	2.1	2.2	2.1
경상GDP 성장률	4.7	4.6	4.3	4.1	3.9	4.2	3.1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2.2	2.5	2.0	1.8	1.8	2.0	0.9
통관수출 증가율	9.9	0.5	5.9	6.9	6.8	5.0	2.9
통관수입 증가율	18.4	1.1	6.6	7.7	6.7	5.5	6.5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3.3	2.7	2.4	2.1	3.1	1.4
취업자수 증가(만명)	80	9	10	12	11	24	17
명목임금 상승률	4.9	3.9	3.9	3.6	3.3	3.7	3.6
국고채금리(3년)	3.0	3.0	2.8	2.6	2.6	2.8	1.6
회사채금리(3년, AA-)	3.8	3.5	3.0	2.9	2.8	3.2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먼저, 실질GDP 성장률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2.2%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이전 5년(2017~2021년) 기간 중 실질GDP 성장률의 실적치인 연평균 2.1%와 유사한 수준이다. 동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 경로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5%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이 둔화되면서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4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잠재GDP 수준에 부합하는 경로로

회귀하며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합산하여 전망하였다. 경상GDP 성장률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3%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및 2023년 경상GDP 성장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GDP디플레이터의 높은 상승률('22년 2.2%, '23년 2.5%)이 예상되면서 각각 4.7%, 4.6%를 기록하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26년에는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2~2026년간 실질GDP 성장률이 2.1~2.5% 범위에서 변동한다는 점에서 경상GDP 성장률은 실질GDP 보다는 GDP디플레이터의 변화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2026년 기간 중 평균 3.1%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2년 소비자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인상 등으로 5.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소비 회복세 둔화, 환율 하락,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3.3%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26년 2.1%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시장 활성화로 전년 대비 80만명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매년 10만명 전후 수준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전 5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는 2022년의 일시적인 높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이전 5년보다 오히려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3년 국고채(3년)금리는 우리나라와 대외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반영하여 각각 3.0%, 3.0%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2022~2026년간에도 연평균 2.8%로 이전 5년의 연평균 수준(1.6%)과 비교하여 1.2%p 높게 전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등에 주로 기인한다.

### [Box] 2022년 세법개정안 등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

정부는 당해연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요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도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2022년 세법개정안 등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2~2026년 국세수입을 전망하였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목별 주요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등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포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종합부동산세)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한편, 2022년 세법개정안 외에 이미 세법이 개정되어 2022~2026년 중 제도의 변경이 계획되어 있는 소득세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인세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도입,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효과도 함께 반영하였다.

[표 30] 세목별 주요 정책 변화

구 분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의 기준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li> </ul> </li> <li>-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20만원)</li> </ul> </li> <li>○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자의 재산요건 완화 및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10%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li> </ul> </li> </ul> </li> <li>○ 근로소득자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li> </ul> </li> </ul>

구 분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세율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4단계의 세율구간을 2단계(중소·중견 3단계)로 축소</li> <li>- 과표 2억원 이하 구간(10%) 및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25%)의 세율 삭제 (단,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까지 10% 특례세율 적용)</li> </ul> </li> <li>○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li> <li>○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공제율 2%p 상향</li> <li>- 중견기업: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공제율 1~2%p 상향</li> </ul> </li> </ul>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율 인상<sup>1)</sup> ('22년) 23.7% → ('23년 이후) 25.3%</li> </ul>
기타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 → 보유주택수에 관계 없이 0.5~2.7%</li> <li>-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li> <li>- 세부담 상한 비율: (3주택 이상) 300% → 150%</li> </ul> </li> <li>○ 증권거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 (코스피) 0.08% → '23년 0.05% → '25년 0%</li> <li style="padding-left: 40px;">(코스닥) 0.23% → '23년 0.20% → '25년 0.15%</li> </ul> </li> </ul>

주: 1) 既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2026년 중 도입될 계획인 제도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제도변화로 인하여 2023~2026년간 총 △66.5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연도별·세목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2023~2026년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합 계	△9.3	△18.4	△19.3	△19.4	△66.5
소득세	△3.5	△5.1	△3.9	△3.3	△15.8
법인세	△1.1	△7.9	△8.4	△8.9	△26.2
부가가치세	△1.8	△1.9	△2.0	△2.0	△7.6
기 타	△2.9	△3.6	△5.1	△5.2	△16.8

주: 1.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함  
 2. 2022년 세법개정안 외에도 既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이후 도입될 계획인 제도 변화에 대한 세수효과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 가. 세목별 전망 방법

중기(2022~2026년)의 구체적인 세목별 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 세목별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세부 세목별로 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경상GDP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경우 임금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과 같은 고용관련 변수와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 등이 있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등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신고분 법인세는 경상GDP성장률,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교역조건<sup>52)</sup>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천분 법인세는 기업의 금융자산, 회사채 금리, 경상GDP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도별 법인세 전망치는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 추정치를 합산한 후,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경상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율 상향('22년 23.7% → '23년 이후 25.3%)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였다.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목별 전망모형을, 과년도수입은 경상GDP 성장률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다른 세목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52) 교역조건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26년간 총수출 및 총수입의 GDP디플레이터 전망치 변동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표 32] 세목별 증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상승률, 실효세율, 경상 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li>◦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li>◦ 이자·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환율, 채권발행 잔액,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ul>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분: 경상GDP, 원/달러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교역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li>◦ 원천분: 경상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ul>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ul>
기타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증여세: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상속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고려하여 전망</li> </ul> </li> <li>◦ 개별소비세: 품목별로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모형(유류분, 자동차분 등)이나 최근의 출고량 추이를 반영(담배분)하여 전망</li> <li>◦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거래대금을 경상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li> <li>◦ 인지세: 경상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li> <li>◦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휘발유 및 경유의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li> <li>◦ 관세: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li> <li>◦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li> </ul>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2~2026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연평균 4.2%)를 하회하며, 이전 5년(2017~2021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연평균 6.7%)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국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와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낮은 것<sup>53)</sup>으로 나타난다.

향후 5년의 국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와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5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변화로 인하여 세수 감소 효과가 크고,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한 자산시장 가격 상승의 정체로 인하여 자산세수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2022년 세법개정안 등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는 2023~2026년간 총 △66.5조원 수준이다.<sup>54)</sup> 또한, 향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로 인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세와 자산거래 빈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는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하거나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2년 129.5조원에서 2026년 164.5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11.0%)과 비교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경상GDP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이전 5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자산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022년 102.3조원에서 2026년 110.9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4.4%)과 비교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sup>55)</sup>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향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

53) 국세수입의 경상GDP 대비 평균 탄성치(절대값 기준): ('17~'21년) 2.2 → ('22~'26년 전망) 1.3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17~'21년) 6.7 → ('22~'26년 전망) 3.5

54) 제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2~2026년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현재 전망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 1.1%p 상승한다.

55)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는 2023년 △0.4조원, 2026년 △5.0조원 등 2023~2026년간 총 △14.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2022년 80.1조원에서 2026년 94.7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1.5%)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세<sup>56)</sup>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2022년 39.3조원에서 2026년 44.1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자산세수는 자산시장의 경기 부진과 세율 인하에 따라 이전 5년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20.4%)과 달리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2~'26	'17~'21
NABO 국세	394.9	399.4	413.2	432.3	453.8	3.5	6.7
소득세	129.5	132.4	141.1	152.9	164.5	6.2	11.0
법인세	102.3	106.0	104.5	107.0	110.9	2.0	4.4
부가가치세	80.1	82.7	87.3	91.1	94.7	4.3	1.5
기타 <sup>1)</sup>	83.0	78.4	80.3	81.4	83.7	0.2	8.4
- 기타 소비세수	39.3	40.4	41.8	43.1	44.1	3.0	△0.01
- 기타 자산세수	43.7	38.0	38.5	38.3	39.6	△2.5	20.4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6) 민간소비 증가율(연평균, %): ('17~'21년) 1.4 → ('22~'26년) 2.5

### 3. 2022~2026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세수입은 2022년 396.6조원에서 2026년 459.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을 매년 1.8~6.8조원 하회하며, 2022~2026년간 합계는 21.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4]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2-26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94.9 (14.8)	399.4 (1.2)	413.2 (3.4)	432.3 (4.6)	453.8 (5.0)	(3.5)
	경상성장률	4.7	4.6	4.3	4.1	3.9	(4.2)
정부	국세수입	396.6 (15.3)	400.5 (1.0)	418.8 (4.6)	439.2 (4.9)	459.9 (4.7)	(3.8)
	경상성장률	5.2	4.5	4.2	4.2	4.0	(4.2)
NABO-정부		△1.8	△1.0	△5.6	△6.8	△6.1	[△21.3]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2022~2026년간 세수전망의 차이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망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추정치는 2023~2026년간 △56.4조원<sup>57)</sup>으로, 정부 추정치인 △47.2조원보다 보다 세수감소 규모가 5년 합계 9.2조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58)</sup> 개별 세법개정 항목별로 차이의 이유는 상이하지만, 대체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최신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것과 향후 세수감소 규모 추계시 최근 감면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2년 국세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57) [Box]에서 추정된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 중 정부와의 비교를 위해 2022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추정치로 한정하여 서술한다.

58)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2024년부터 정부 전망과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조원 낮게 전망한 점과 경상GDP 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성 수준의 차이 또한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0.1%p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2~2026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의 경상GDP 성장률 대비 탄력성(세수부양성) 또한 정부 1.4, 국회예산정책처 1.3 수준이다.

##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

ISBN 979-11-6799-108-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32-001981-14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